

제1회 다문화사회의 모든 이를 위한 정보포럼 : 다문화가정의 정보활용

시 간 /

2009년 12월 8일 (화) 13:30-17:30

장 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대회의실

주 최 /



「 제1회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 포럼: 다문화가정의 정보활용 」은 다문화사회에서 정보화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자 2009년 12월 8일 개최된 제1회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 포럼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발간사

지난 몇 년간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 여성, 중국 동포는 물론 그들의 자녀까지 세대를 거듭하여 이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선정하고, 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이주민의 사회 정착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6년부터 결혼이민자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는 진통이 뒤따릅니다. 새로 편입된 이주민은 언어 소통, 경제적 빈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ERD)」는 '한국 사회가 다민족사회가 된 만큼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 21세기 문화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단합된 사회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소통 확대, 사회규범이나 제도 등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 제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협력, 다양한 기회 창출이 21세기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ICT입니다. ICT를 활용해 국민과 정부간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정부 서비스나 정책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주체간의 협력과 협업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의료·교육·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고 공정하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이 다문화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정보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정보화 지원 실천전략'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우리 사회 다문화 포용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09. 12.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성태 원장

발간사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세계화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경제 영역은 물론, 사회·문화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개방화, 국제교류의 증가 등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관한 다양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이주 외국인 생활의 안정과 내국인의 다문화사회 이해 증진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 간의 활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해와 소통의 도구인 정보 매체의 적극적 활용은 우리가 보다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는 ‘모두를 위한 정보 사업(Information for All Programme)’을 통해 정보는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관용과 평화를 향한 길이라는 사실을 적극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보 사업’이 지향하듯이,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평화로이 이행하기 위해 정보화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에서 정보화의 역할이 여지껏 심도 있게 다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교육 등 정보화교육 사업은 시행되어왔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거나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이 다문화사회에서 정보화의 역할에 대한 국내적 관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바람직한 정보화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포럼의 결과물이 보다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발간사를 마칩니다.

2009. 1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

회의일정_ 12월 8일 (화)

13:30 - 13:40 참가자 등록

13:40 - 13:50 **개회식**

- 개회사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환영사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13:50 - 15:20 **주제발표**

13:50 - 14:20 <주제 1> 다문화 사회와 정보통신 매체의 역할과 과제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4:20 - 14:50 <주제 2> 정보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실현: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시사점
-**김양은** 중앙대학교 언론학 박사 / 미디어교육 전공

14:50 - 15:20 <주제 3>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화교육정책 지원방안
-**박영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지원부 부장

15:20 - 15:45 **휴식**

15:45 - 17:00 **사례발표**

15:45 - 16:10 <사례 1> 이주민 정보화교육 현황과 대안
-**문중석** 푸른시민연대 대표

16:10 - 16:35 <사례 2> 올리볼리 그림동화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총괄실장

16:35 - 17:00 <사례 3> 연천군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사례발표
-**경호연** 연천군청 담당자

17:00 - 17:30 **종합토론**

- 주요내용: 포럼 주제 및 발제문에 대한 의견 공유 및 논의 등
- 토론자: 학자, NGO 등 관련분야 전문가 2인
 - 문경희** 강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목차

주제발표

- <주제 1> 다문화 사회와 정보통신 매체의 역할과 과제 3
-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주제 2> 정보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실현: 11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시사점
- **김양은** 중앙대학교 언론학 박사 / 미디어교육 전공
- <주제 3>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화교육정책 지원방안 25
- **박영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지원부 부장

사례발표

- <사례 1> 이주민 정보화교육 현황과 대안 69
- **문중석** 푸른시민연대 대표
- <사례 2> 올리볼리 그림동화 77
-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총괄실장
- <사례 3> 연천군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사례발표 85
- **경오연** 연천군청 담당자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 포럼: 다문화가정의 정보 활용

1부. 주제 발표

“다문화사회와 정보통신 매체의 역할과 과제”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정보화를 통한 다문화사회의 실현: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시사점”

김양은 중앙대학교 언론학 박사 / 미디어교육 전공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화교육정책 지원방안”

박영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지원부 부장

다문화사회와 정보통신 매체의 역할과 과제

한 건 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I.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 열풍’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글레이저(Nathan Glazer) 교수가 미국 사회의 오랜 문화 전쟁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주의자”가 되었다고 선언한 것을 연상케 한다¹⁾.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된 이후, ‘다문화’는 언론 매체에서 익숙한 기표가 되었다. 명절이나 가정의 달이라는 5월과 같은 특정 시점에 집중되던 ‘다문화 가정’과 이주노동자 관련 기사는 이제 연중 특집 기사로 보도되고 있으며(동아일보 2009년 ‘달라도 다함께’ 특집 기획), 방송에서는 미모의 외국인 여성을 내세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공익광고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계도적 소재로 사용되던 ‘다문화’는 이제 기업의 영리 광고에서도 홍보의 기표로 사용되고 있다(한건수 2009).

이러한 변화는 국제이주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가 변하면서 시작되었다. 노동력 송출국이었던 한국이 1980년대 말 이후 국제이주의 목적국, 노동력 수용국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이주민 공동체는 불과 20여년 만에 출신 국가나 체류 형태면에서 형태나 규모면에서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에 육박하는 이주민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는 한국사회에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민족-국민-문화의 동질성에 근거한 한국 사회를 민족과 국민의 분리, 문화적 동질성에서 다양성으로의 변화를 축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

1) N. Glazer, *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이다. 정부나 학계, 시민사회가 모두 ‘다문화주의’ 혹은 ‘다문화적 가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민족 한국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 고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양적으로 급성장했으며 다양한 주제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실태 보고서, 정책 제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회과학의 모든 분과 학문이 이제는 다문화주의나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개최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열풍에 대한 우려 역시 급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나 시민 사회가 ‘다문화 사회’ 혹은 ‘다문화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듯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 면에서는 서로 상이한 구상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 사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다문화사회가 ‘어떤 다문화사회인가?’ 혹은 ‘다문화 사회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으며(한건수·설동훈 2007; 오경석 2007), 현재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다문화사회의 건설이라기보다는 이주민의 동화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7; 김현미 2005)도 폭넓게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 자체에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하며 특히 사회적으로 제기된 인권침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부부간 갈등 및 문화 갈등, 다문화 가치 확산 등과 같은 사회적 의제들을 임시방편적인 응급처방으로 해결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건수 2009, Han 2007).

또한 넘쳐나는 다문화 사회 관련 논의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민들에 맞추어 진행되기 보다는 오랫동안 다민족 사회를 경험한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가들의 고민을 한국에 비추어보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작 한국의 이주민들에게 시급한 문제를 초보적인 문제로 도외시 하고 한국의 이주민들에게는 아직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우를 범하게 한다. 지나친 ‘선행학습’의 부작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다문화 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포럼: 다문화 가정의 정보이용’도 이런 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왜 ‘다문화 가정’의 정보이용을 논의해야 하는가? 정부의 예산이나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 뒤늦게 올라타기 위한 또 하나의 ‘열풍’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보 사회는 한국 사회가 다민족화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한 축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한국의 상징으로 거론될 만큼 정보화 사회 혹은 정보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 기표가 다문화 사회와 정보 사회라 할 때 이 두 사회의 이행 과정과 전략은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 다문화 사회에 관한 논의나 정책적 고민에 정보 사회의 제 문제들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질적인 실태조사나 경험적 연구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불가능함으로 앞으로의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II. 정보화 사회와 다문화 정책

1.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한국 사회를 본격적인 정보 사회로 이행시키고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시도들이 해외의 우수한 시사 잡지에 소개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보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계천과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정보기기들과 휴대전화와 무선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은 첨단 정보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정보 사회로의 변화 모습은 일정부분 다문화 사회의 모습과 일치한다.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정보의 흐름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약화시키며, 이를 통한 문화 교류의 확대는 국경으로 구분되며 절대적 실체로 간주되던 문화 개념을 변화시켜 유동적인 실체로 전환시킨다. 또한 다양한 정보 매체들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유통시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관련된 과학 기술 정책뿐만 아니라 정보 매체와 기술의 이용과 접근에서 차별과 격차를 예방하려는 사회정책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보 사회의 구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나 문화적 소수자들이 정보 통신 기술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현재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이주민의 정보 사회 참여도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것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이주민 지원 정책은 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인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한국 사회로의 적응과 정착 및 자립에 집중되고 있다. 결혼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보조하며,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나 유학생, 난민과 같은 다른 이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이주민의 정보 사회 참여 실태와 격차

정보 사회의 개념을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해 구축되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장으로 한정해서 이해한다면,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이주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 한국의 정보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주민들이 노출된 정보 사회의 매체는 휴대전화기나 컴퓨터와 인터넷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주민들이 이들 정보통신 매체들을 어떻게 어느 빈도로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매체별로 살펴보면 휴대전화기의 활용이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의 대부분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전화기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에서의 생존을 위한 필수 기계이자 본국의 가족이나 친지와 사회적 유대의 끈을 유지해 준다.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들의 휴대전화기의 사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들에게 휴대전화기는 일상생활의 도구(커뮤니케이션, 알람, 지하철 노선 안내도, 일정관리, 사진촬영 등)이자 물리적으로 단절된 모국과의 사회관계를 유지해 주는 필수품이다(김경희·윤해진 2008; 이경숙 2008). 휴대전화기의 활용도를 보면 유학생들이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전문적임을 알 수 있다. 유학생들은 일정관리, 문자메세지,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개인 미디어’로서 휴대전화기를 활용하는 반면에 결혼이민자들은 위급 상황에서 남편과 연락하거나 본국의 가족들과 통화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휴대전화기를 통한 정보 사회의 참여 면에서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차이를 보여주며, 동시에 휴대전화기로 대표되는 한국의 정보 사회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휴대전화에 집착하여 강박적인 이용 성향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초등학교생들이나 아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비판적이다. 실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들이 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거나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반해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만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모두 휴대전화기를 본국과의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적 매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국제전화 비용 때문에 실제 의사소통은 메신저나 전화카드를 주로 이용하지만 본국과의 연결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휴대전화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휴대전화기에 반해 이주민들의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없다. 다만 필자의 조사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유학생,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순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같다.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터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메신저나 온라인 채팅과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

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디지털대학교의 관련자에 따르면 이 사업이 초기 난관 중의 하나가 결혼이민자들의 낮은 컴퓨터 보유와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이었다고 한다. 실제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서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주민이 한국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활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 장벽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본 언어가 한국어나 영어이기 때문에 많은 모국어를 통한 컴퓨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컴퓨터 교육이나 모국어 홈페이지 작성을 지원해 온 단체도 많으나 여전히 이주민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나 콘텐츠는 부족한 편이다. 이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이나 자조집단 사이트가 보다 많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기관의 다문화 포털 사이트도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 물론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 포털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국립중앙도서관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에 다문화 관련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이주민 지원단체들도 이주민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트들은 여전히 한국어로 운영되고 있어 이주민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다문화 사회 구성과 정보통신 기술의 잠재력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거나 접근하는 실태는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정보 통신 기술이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하다. 우선 이주민의 휴대전화기 사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보 통신 기술과 그 매체는 이주민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국내외적으로 유지하게 해 준다. 결혼이민자들에게 정보 통신 매체들은 낯선 사회의 적응을 지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서 가족과 이어주는 비상연락 체계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이주민 지원 교육 역시 잠재력이 높은 영역이다.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민들이 자유롭게 교육 장소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은 이들로 하여금 한국어와 한국문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매체로 활용될 것이다. 한국디지털 대학의 한국어 온라인 교육 경험은 결혼이민자들의 컴퓨터 보급과 활용교육이 동반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소외된 교육 환경을 개선시켜 줄 것을 기대하게 해 준다.

다문화 사회의 건설에서 중요한 요소인 이주민의 주체적 참여 문제도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한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통해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나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정보 제공 사이트를 넘어 이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국가나 민족별 자조집단들이 모국어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와 의견을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 또한 이들 사이트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 공간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력은 이주민들이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에서 한국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대부분 포털 사이트들이 외국인이나 이주민의 입장에서 가입과 참여 과정에 어떤 차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컴퓨터나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언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III. 결론: 이주민의 정보격차 극복과 한국의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정보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인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인정하는 출발점이다. 국내의 정보 관련 산업의 관행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수월한 길을 걸어온 경향이 있다. 표준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운영체계가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며, 이러한 경향은 정보 사회의 참여자와 주체의 측면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보 사회에서 소수자로 전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단 이주민만은 아닐 것이다. 노인층, 저학력 계층, 저소득층, 성적 소수자, 장애우 등 수 많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보 사회의 소수자로 존재한다면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소수자가 이주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정보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사회의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문화 사회와 정보 사회는 갈등의 확산 혹은 갈등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기도 한다. 다문화 사회가 집단의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에 근거한 정체성의 정치의 활성화로 다양한 갈등이 표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 사회 역시 현실과 사이버 세계에서 공히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갈등은 실질적으로 소통보다는 갈등과 대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나 정보 사회 모두 새로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발전시켜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 사회와 정보 사회로의 이행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야 할 접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사회의 논의에 정보 격차와 정보 사회의 관점을 추가하는 것은 의의 있는 시도이다. 다만 서두에서 강조했듯이 현재 다문화 관련 담론과 정책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부른 탁상공론이나 당연한 문제제기 보다는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접하거나 활용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실태가 어떤지를 실증적으로 검토

하고 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다. 또 하나의 ‘다문화 프로젝트’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보급과 같은 일회성 혹은 전시성 이벤트를 계획한다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다문화 열풍’에 편승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경희·윤혜진(2008). 「또 하나의 이주, 유학과 휴대전화」 이경숙·김경희 외 『젠더, 이주, 모바일 놀이』 서울: 한울.
- 김이선·김민정·한건수(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 다문화 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사)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자료집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 이경숙(2008). 「이주여성의 휴대전화 경험과 정체성」 이경숙 김경희 외 『젠더, 이주, 모바일 놀이』 서울: 한울.
- 한건수(2007). 「비판적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을 위한 인류학적 성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사회의 이해』, 서울: 동녘.
- _____ (2009). 「한국 사회의 다민족화와 ‘다문화 열풍’의 위기」, 『지식의 지평』 7호: 192-208.
- 한건수·설동훈(2007). 『이주자가 본 이주정책.』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Han, Geon-Soo(2007). “Multicultural Korea : Celebration or Challenge of Multiethnic Shift in Contemporary Korea?” *Korea Journal*, 47(4): 32 ~ 63.

정보화를 통한 다문화사회의 실현: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시사점

김 양 은

(중앙대학교 언론학 박사/미디어교육 전공)

1. 들어가는 말

최근 교육계나 정부, 그리고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 중의 하나가 ‘다문화’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각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등의 프로그램과 교육교재들이 개발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나 미디어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내의 다양한 격차해소라는 관점에서 ‘다문화’에 접근하고 있다.

실제로 이 두 개념 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문화주의 접근에서 시작한 다문화주의와 기술주의 관점에서 접근한 정보화교육은 본질적으로 접근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다문화주의’와 ‘정보화교육’은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사회내의 불균형과 격차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다문화와 관련된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초기의 ‘정보화교육’이 주장한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융합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배려와 관심은 반드시 필요한 부문이다. 하지만,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한 대상은 항상 ‘소수자’에 한정되어있다. 정보화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초기 정보화교육은 디지털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실버계층, 그리고 디지털에 접근이 어려운 가정주부들, IMF와 함께 발생한 실직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사회내의 기반으로 ‘디지털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역시도 여전히 대다수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검토해야 할 ‘다문화사회의 실현’이라는 과제는 단지 기술의 격차를 극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주의 접근방식과 문화주의 접근방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실 기술은 확연하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고, 이

를 도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화는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술은 수치로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문화는 불가능하다.

문화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의 정의, 가치, 이념 등이 한데 어우러져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한 사회를 지탱하는 이념인 셈이다. 그래서 문화란 1-2년의 단기간에 변화를 얻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다문화’는 한국사회내에서 단기간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문이다. 단일민족, 단일국가라는 개념으로 몇백년을 이어온 사회의 지배이념이 몇몇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소수자에 국한된 교육만으론 다문화사회의 실현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2개의 개념인 기술과 문화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고 불리는 현재 소수자들에 대한 교육과 이를 통한 다문화사회의 실현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2. 다문화사회 그리고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은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에서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다. 초기 다문화주의의 관점은 주로 이주민의 사회적 동화 내지 적응을 위한 시각에서 주류국가의 지배가치로의 통합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 논의되는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하나의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이상길·안지현, 2007). 사실 이제까지 많은 국가들은 소수 인종, 민족 집단에 대해서는 공통문화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기도 해왔다. 많은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자국 인종이나, 민족이 아닌 부문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란들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실상 많은 국가들에서 사적인 영역에서는 소수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실상 우리가 ‘소수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자하는 것도 이러한 발상 중의 하나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공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문화의 복수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부문보다는 단일문화에 대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사실 크게 통합과 동화라는 2가지 관점에서 논의된다. 다문화주의에서 동화모형적 관점은 외국인이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입장이다. 반대로 통합 모형은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니라 공존에 목적을 둔다. 즉 외국인들이 출신국에 따른 특성을 간직하면서 전체사회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며, 주류사회 관계와 모국 가치 유지라는 2가지 가치를 통합시키는 형태이다(설동훈, 2005). 실제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주창하고 있는 유네스코(UNESCO)는 1980년대부터 각국 정부의 공식문건에서 동화(assimilation)라는 용어 대신 통합(integration), 혹은

결합(incorporation)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Assimilation’ 이 일방적인 동화를 의미한다면, ‘integration’ 이나 ‘incorporation’ 은 이민자 혹은 소수자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는 쌍방향적인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김희정,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은 최근 여성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국제결혼이 증가하던 시기와 맞물려서 확대되었다. 아래의 <표 1>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국내의 경우에 2003년부터 증가추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2005년, 2006년에 무려 전체결혼에서 12~13%가 국제결혼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중에서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는데, 2008년에는 국제결혼 비율에서 78%가 외국여성과의 결혼임을 알 수 있다.

<표 1>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연도	전체결혼 (A)	국제결혼 (B)	비율 (B/A)	외국여성 (C)	비율 (C/A)	비율 (C/B)	외국남성 (D)	비율 (D/A)	비율 (D/B)
2002	304,877	15,202	0.05	10,698	0.04	0.70	4,504	0.01	0.30
2003	302,503	24,776	0.08	18,751	0.06	0.76	6,025	0.02	0.24
2004	308,598	34,640	0.11	25,105	0.08	0.72	9,535	0.03	0.28
2005	314,304	42,356	0.13	30,719	0.10	0.73	11,637	0.04	0.27
2006	330,634	38,759	0.12	29,665	0.09	0.77	9,094	0.03	0.23
2007	343,559	37,560	0.11	28,580	0.08	0.76	8,980	0.03	0.24
2008	327,715	36,204	0.11	28,163	0.09	0.78	8,041	0.02	0.22

출처 : 통계청(2009)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국내 다문화가정의 특성은 앞서 지적한 외국여성과 국내남성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있지만,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국내 다문화가정의 또 다른 특징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 중에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국적의 대부분이 동남아 국가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이다. 특히, 초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 2005년까지 중국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점차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등의 수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서 국제결혼 중 외국인 남편의 국적을 살펴보면, 일본, 중국, 미국 등의 순이며, 이외에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의 서구권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국제결혼 중 외국인 아내의 국적

국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필리핀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베트남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캄보디아	...	19	72	157	394	1,804	659
태국(타이)	327	345	324	266	271	524	633

몽골	194	320	504	561	594	745	521
중국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일본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우즈베키스탄	183	328	247	332	314	351	492
미국	267	322	341	285	331	376	344
기타	702	896	911	851	905	983	1,010

출처 : 통계청(2009)년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표 3> 국제결혼 중 외국인 남편의 국적

국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파키스탄	126	130	100	219	150	134	117
중국	263	1,190	3,618	5,037	2,589	2,486	2,101
일본	2,032	2,250	3,118	3,423	3,412	3,349	2,743
독일	81	94	109	85	126	98	115
영국	86	88	120	104	136	125	144
캐나다	172	219	227	283	307	374	371
미국	1,204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호주	90	109	132	101	137	158	164
기타	450	723	779	993	794	922	939

출처 : 통계청(2009)년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사실 국내 다문화가정의 특성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주로 하고 있다는 특성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특히, 동화가 아니라 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고자 할 때, 사회적, 공적 영역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작년부터 교육부와 행안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계조사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로 국내에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이들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4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기준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 되면 국제적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분류된다. 현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에 이들이 점차적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해가면서 학교현장이 다문화사회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문제는 비단 국제결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우리나라 학교 현장은 본격적인 다문화 현장이 될 것이다.

<표 4>국제결혼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비율(출처: 교육부 2008년4월 발표자료 재구성)

구분	초등학교 (A)	비율 (A/D)	중학교 (B)	비율 (B/D)	고등학교 (C)	비율 (C/D)	합계 (D)
2005	5,332	0.87	583	0.10	206	0.03	6,121
2006	6,795	0.85	924	0.12	279	0.03	7,998
2007	11,444	0.85	1,588	0.12	413	0.03	13,445
2008	15,804	0.84	2,205	0.12	760	0.04	18,769

위의 수치들은 한국사회도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즉, 결혼과 노동인구의 유입으로 인해서 점차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정 내에서 사회로 확장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변화는 바로 최근 ‘다문화가정’이라는 개념의 사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점차 사회 내에 다문화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국제결혼이나 혼혈아라는 단어보다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란 용어자체는 우리와 다른 민족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공동체를 의미한다. 국제결혼이란 용어가 내/외국인 사이의 혼인관계라는 국적에 따른 차별적 구분을 내포하는 반면에,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열린 시각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기존에 국제결혼에 의한 자녀를 ‘혼혈아’라고 부른 것도 인종적 개념에 바탕을 두어 근본적으로 차별적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반면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개념은 인종이나 국가나 지역을 초월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바라보는 개념이다¹⁾.

실제로 한국의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은 한국이 여전히 단일문화를 고수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다문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초등학교육현장에서도 여전히 단일민족의 가치관은 뿌리깊게 박혀있다. 교과서 등 이제까지 모든 교육내용에 담긴 사회가치들이 단일민족과 문화의 우월성을 논의하고 있다(박희철, 2007)²⁾는 주장들도 있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외에도 준비되지 않은 교사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부적응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에는 언어능력 부족, 기초학습능력의 부진, 정서적 불안 등과 같은 내적요인 이외에도 불안정한 학습환경, 편견과 놀림, 교사의 인식부족 등 환경요인으로 인해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조영달, 2006).

1) 최근 코시안(Kosia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동남아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의 국내유입이 활성화되면서 그들이 구성한 가정이나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일컫는 신조어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코시안이라는 용어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을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2)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밝힌 내용으로 단일문화, 단일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나 민족문화를 폄하하는 내용들이 담겨있기도 하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실상 사회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나, 혹은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의 경우에 한국사회에서 부적응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이전에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다른 문화로 인해서 가족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많은 내,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구성되는 조건은 서구 유럽이나, 미국 등과는 차별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관점도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분명히 찾아야할 필요성이 있다³⁾. 이제까지 국내의 다문화교육은 ‘소수자 적응’이라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면, 이제는 다문화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단지 소수자들을 위한 복지차원의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다수가 다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4가지가 고려되어야한다.

첫 번째로, 배타적 동화교육에서 개방적 다문화교육으로 전환해야한다. 즉, 동화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다문화를 이해하고, 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변화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문화일원론적 관점에서 문화다원론적 관점으로 전화해야한다. 단일문화, 단일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보다는 소수문화의 가치, 특성 등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 일반학생, 일반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한다. 이는 다문화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개방적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소수자들의 사회적응교육이 아니라, 다수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이 우선시 되어져야한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정의 교육이 적응교육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교육 및 공동체 교육으로 변화하여야한다. 이제까지 국내 다문화가정의 교육은 소수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한국어교육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한국사회내에 어우러지는 것이다. 소수공동체간의 갈등의 발생이나, 사회내에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목표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3) 실제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외국인근로자/이주노동자, 코시안/코메리칸/온누리안,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 외국인근로자 자녀/국제결혼자 자녀/외국인가정 자녀/다문화 가정 자녀, 국제결혼자/여성결혼이민자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곧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방향 역시 혼선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박혜미, 2008).

3.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방향성 모색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단일민족이라는 사회적 사상은 거의 몇백년 동안 사회를 지배해왔다. 이같은 사회의 이념이 단기간 내에 사회에서 장벽을 걷어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실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논의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바로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과 시민영역에서의 ‘정보화교육’ 으로 볼 수 있다. 덧붙이자면 정보화교육과 함께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교육’ 을 들 수 있다. 사실 외국인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언어능력’ 이다. 이것이 기본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사회참여, 정보화교육 등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까지 ‘정보화교육’ 의 대부분은 ‘정보화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서 국내에 거주하게 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문이 언어에 대한 영역이다. 실제로 언어소통의 문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화교육은 ‘한국어교육’ 과는 별개로 분리되어서 논의되어야한다. ‘정보화교육’ 의 목적은 디지털리터러시의 습득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능력의 향상에 목표를 두어야한다.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행해지는 정보화교육은 대체로 사회내 디지털 격차의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 사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화교육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가진 ‘언어’ 라는 문제로 인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현실적으로 일반인 대상의 디지털격차 해소에만 목적을 둔 교육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때, 다문화가정의 정보화교육은 기존의 정보화교육프로그램과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살펴볼때, 정보화교육에서도 다문화교육이 가지는 가치와 지향점이 함께 다루어져야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사회내의 불평등해소와 기술격차 해소, 그리고 이를 통한 인력양성이라는 목표이외에 다문화사회에 기반한 특수한 교육내용과 목표를 구현해야한다.

다문화가정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2가지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가정내에서의 소통부족과 이로인한 문화격차의 발생, 그리고 자녀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

는 자녀의 문제까지 내,외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현재 각 부처별로 실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자녀와 부모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수자 적응교육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은 소수자의 수준과 대상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적응 교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정보화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실현해야할 가치들 중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언어문제와 더불어,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사항은 ‘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이다. 이 교육 형태는 다문화주의자 관점에 기초하여 소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와 문화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목적을 둔다. 주류사회와 다수자에의 적응만을 강조하는 다문화교육은 소수자의 정체성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근거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서 이같은 정체성 상실의 문제는 매우 크게 대두되는 영역이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정내에서는 이중문화가 함께 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반학생들, 일반대중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 이같은 정체성 상실은 사회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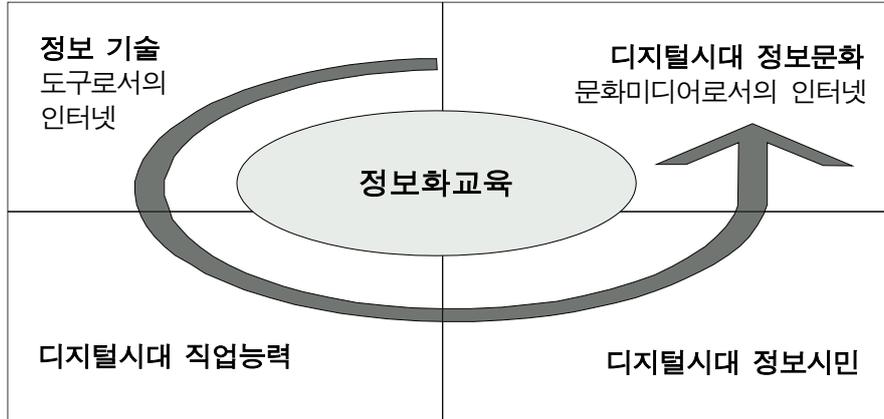
다문화가정의 결혼여성이나,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중문화를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는 현재의 사회흐름에서 이중문화를 이해하고, 다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사회내의 걸림돌이 아니라, 사회참여의 또 다른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정체성교육에서는 단지 사회내의 적응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들 자신의 문화에 대한 긍정과 이를 자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의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가진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아야하며, 또한 한국사회내에서 자리잡기위한 기반으로서의 사회참여를 위한 언어능력, 기술능력, 문화능력 등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2005년 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⁴⁾는 기존의 정보화교육이 한국어교육, 그리고 도구적 관점의 기술교육을 넘어, 이들의 사회참여와 정체성 고취를 목표로 한 문화중심적 교육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졌다.

4)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5),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내용을 일부발췌 및 요약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림 1> 정보화교육 개념도



이 프로그램은 정보화교육의 개념을 기술교육에서 문화교육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대상의 정보화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 국내 정보화교육이 기술중심적인 도구로서의 디지털격차 해소에 주목하고 있었다면, 최근에 정보화진흥원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정보화교육 혹은 정보리터러시의 개념은 디지털사회의 문화격차해소라는 문화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기반해서 볼 때, 다문화교육에서의 정보화교육은 그 대상과 무관하게 일반화된 다음의 모형을 토대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단지 한국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기술도구의 습득에 목표를 두고 있었던 초기 교육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의 정체성 고취를 목표로 한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방식에서 비롯된 교육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시민양성을 위한 정보활용역량 제고라는 대전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보다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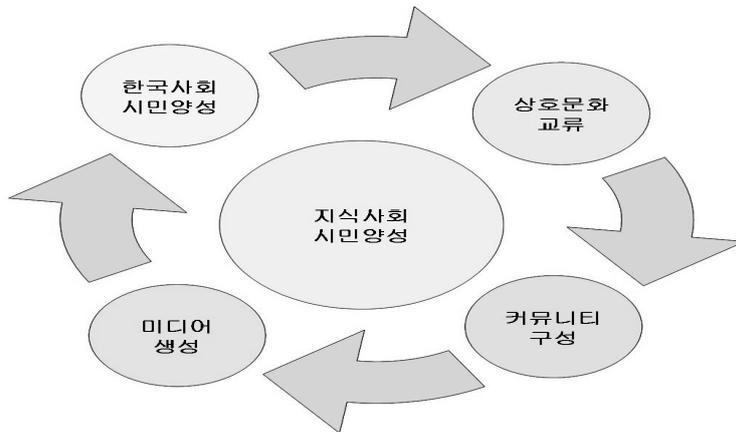
- (1) 이주여성이 정보통신기술을 습득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 (2) 정보통신기술 습득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와 소통을 하도록 돕는다.
- (3) 정보통신기술 능력 향상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생활의 확대를 도모한다.
- (4) 이주여성의 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고 정보사회의 시민으로 활동한다.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은 이들의 정보문해가 가족의 정보문해와 그 맥이 닿아있다는데도 있다. 따라서 일반인 대상의 정보화교육의 경우와 비교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보화교육은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의 향상을 통한 시민교육적 차원’,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통한 보편적 목표’ 차원의 2가지로 구성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보화교육은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구성되어야 한다.

이같은 목표는 첫 번째로 ‘시민교육’ 차원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문화교육’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한다. 기술적인 도구적 차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화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정보화교육 속에서 ‘한국사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미디어활용능력’을 높임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정보리터러시의 획득을 형성할 수 있어야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교육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통한 시공간의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가들과 한국문화간의 상호문화적 교류에 대한 세부적 목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커뮤니티 구성들을 도와줌으로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여성결혼이민자의 정보화교육 개발도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할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상호문화교류’라는 다문화적 관점에 대한 교육이다. 실제로 상호문화교류와 커뮤니티 구성은 ‘한국’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문화’,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 간의 ‘문화격차’등을 상호 이해시키고, 교류시키는 효과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출신국가에서는 엄연하게 ‘성인’이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에도 ‘성인교육’으로서의 개념이 도입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획득해야 할 목표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가치실현이다. 결국 이들이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여러 문화권을 이해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은 일반적인 정보화교육의 4가지 목표와 4가지 능력 모델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교육대상이 특화된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화교육의 목표는 ‘디지털시대의 정보시민(능력)함양’이라는 일

반화된 목표와 ‘여성결혼이민자를 고려한 문화능력의 함양’이라는 2가지 대전제 속에서 다루어져야한다.

먼저, “정보시민으로서의 정보능력 함양”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 내에 만연해 있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기본적 정보능력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보능력의 형성은 기본적인 정보기술의 활용능력에도 있겠지만, 정보문화에서 중요시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내고, 따라서 미래의 정보인력으로서의 사회참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문화교육”은 보편성 차원에서의 문화교육과 ‘여성결혼이민자’라는 특수성 차원에서의 소통교육이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기존 정보화 교육에서 가지는 ‘문화교육’적 요소인 디지털문화의 향유에 대한 요소를 포함하고, 이에 덧붙여 문화생산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삼는다. 여성결혼이민자라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적 관점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문화 간 상호교류의 장으로서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상호문화교류의 장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출신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회와의 소통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2가지 대전제를 다시 앞서 제시한 기본 정보화교육 모형에 적용시키면 기술교육, 사회교육, 문화교육, 소통교육의 4가지 내용을 담고 진행되어야한다. 각각의 정보화교육의 영역 및 목표는 아래의 <그림 3>와 같이 설정이 가능하다.

<그림 3> 정보화교육의 영역 및 목표

<p>기술교육</p> <p>정보기술능력의 향상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 해소</p>	<p>소통교육</p> <p>대화통로로서의 정보기술활용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문화교류</p>
<p>실생활에서의 정보활용 (홈쇼핑/홈뱅킹/커뮤니티형성) 사회참여의 도구로서의 정보기술활용</p>	<p>정보문화의 이해 컨텐츠 생성 및 이용능력 정보시민으로서의 역할책임</p>
<p>사회교육</p>	<p>문화교육</p>

다문화교육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정보화교육은 ‘한국어의 습득’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차원의 정보화 문해교육과 연관성을 맺고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정보화교육에서 대다수가 ‘한국어교육’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의 정보화교육은 일반적인 주부대상의 정보화교육과는 다른 차원과 형태로 구성되어야한다.

최근 미디어리터러시의 범위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미디어를 기반으로한 미디어 교육이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교육프로그램은 대다수가 미디어 제작경험을 통해서, 미디어제작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사회와 소통하게 하는 형태로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는 문화적 접근방식으로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도 소통차원의 디지털미디어, 디지털의 활용에 대한 영역이 포함되어 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문이기도 하다. 이주민인터넷방송(<http://mntv.net>)이 이들 디지털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별 특성이나, 한국어능력, 컴퓨터능력 등에 따라서 일반화된 보편적 교육의 형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별교육이나, 혹은 다양한 교육전략들이 구성되어야한다. 무엇보다 정체성확립을 통한 다양성확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다문화교육이 가지는 가치와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정보화교육프로그램의 설계는 차별성과 특수성에 기반할 수 밖에 없다.

4. 나가는 말

다문화교육으로서 정보화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일차적인 기술교육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보화교육의 초기에 제안된 컴퓨터리터러시의 개념은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정보문화지수라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초기의 정보화교육이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소수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었다면, 현재의 정보화교육은 디지털시대의 시민교육, 문화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문화교육과 정보화교육에서 일치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본질적으로 소수자인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교육의 차원은 아니라, 다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내의 공통문화로서 이해하는 과정으로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 차원에서 다문화교육은 논의되어질 수 있다. 첫째는 소수자인 다문화가정(새터민,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등)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교육으로, 적응교육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한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언어, 기술, 문화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두 번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성에 기반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 이 2가지가 동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한다.

정보화교육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내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교육으로서, 이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 그리고 가정내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한다. 이들 교육에는 디지털사회의 시민교육, 문화교육적 접근방식을 다

문화교육 차원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정체성 확립, 사회참여 및 소통능력의 확대라는 점에서 가능한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한다.

앞서 지적했지만,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접근방식 만으로는 다문화사회 실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문화가정이 가진 디지털격차,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격차들을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은 언어교육이 기반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쉬운일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다문화교육이 정보화교육과 도구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일일 것이다. 교육은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목표,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가져야만 실효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일반인 대상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새로운 교육콘텐츠가 개발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쏟아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이들에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그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콘텐츠를 포함한 형태로 개발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 김희정(2007).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57~79쪽).
- 박혜미(2008). 이주, 다문화, 미디어교육. 『ACT!』, 54호. 미디어엑트.
- 박혜미(2008). 이주, 다문화, 미디어교육. 『ACT!』, 54호. 미디어엑트.
- 설동훈(2005). 이민과 다문화사회의 도래. 김영기(편). 『한국사회론』(3~23쪽). 전북대학교 출판부 .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이상길·안지현(2007). 다문화주의와 미디어/문화연구: 국내 연구동향의 검토와 새로운 전망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1권 5호, 58~83.
- 조영달 외(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 최충욱·모경환·김연권·박성혁·조난심·오은순·설규주·차조일·한용택·우희숙·서종남(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5), 여성결혼이민자의 정보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통계청(2009), 통계로 보는 여성, 서울: 한국통계청
- Banks, James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모경환·최충욱·김명정·임정수(공역).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화교육 정책 지원방안

박 영 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지원부)

I. 들어가며

1. 현황

세계화의 진전과 국가간 인적교류 확대, 국제결혼 증가 등에 따라 우리사회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09년 5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¹⁾은 1,106,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593,665명)의 2.2%이며, '08년 891,341명보다 215,543명이 증가(24.2%)하였다.

■ 외국인주민 :

('06년)536,627명→('07년)722,686명(34.7%)→('08년)891,341명(31.4%)

■ 외국인근로자 :

575,65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52%에 해당('08년도 대비 137,930명 증가, 31.5%)

■ 결혼이민자 :

125,67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4%에 해당('08년도 대비 22,960명 증가, 22.4%)

■ 국제결혼 건수(총 혼인건수 대비) :

('01년) 15,234건(4.8%) → ('07년) 38,491건(11.1%)

1) 외국인주민 :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그 자녀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90일 이상 체류자)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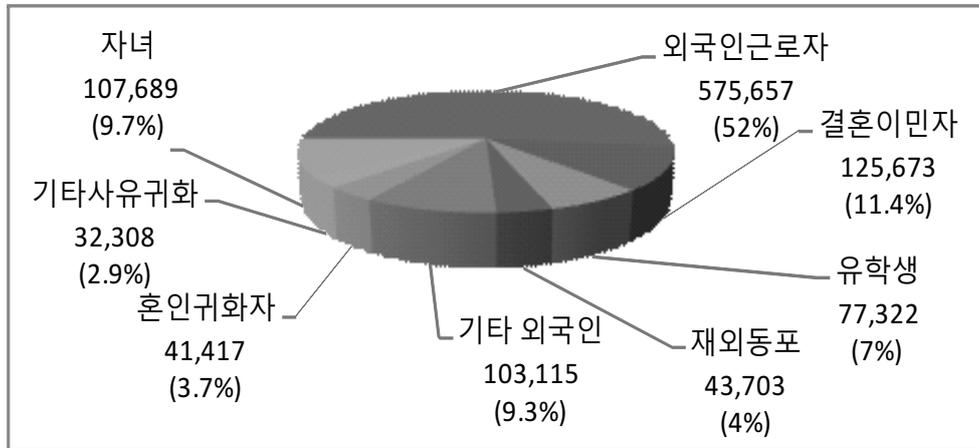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자에 한함

- 한국국적 취득자 :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귀화자

- 외국인주민 자녀 :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부모

※ 결혼이민자,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를 국적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유형에 따라 구분

<그림 1> 외국인주민 현황



이 중 결혼이민자는 총 125,67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4%에 해당, '08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자녀 역시 107,689명으로 '08년 대비 49,682명이 증가(85.6%), 중요한 정책 대상자로 부각되고 있다.²⁾

이처럼 한국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어 다문화가족과 공존하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쉽게 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이들은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시민권을 행사할 사회 구성원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는 다민족 사회 형성에 배타적이고, 외국인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시각이 부족해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³⁾

한편,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결혼이민자 상당수가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 언어소통 문제,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문제, 가족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등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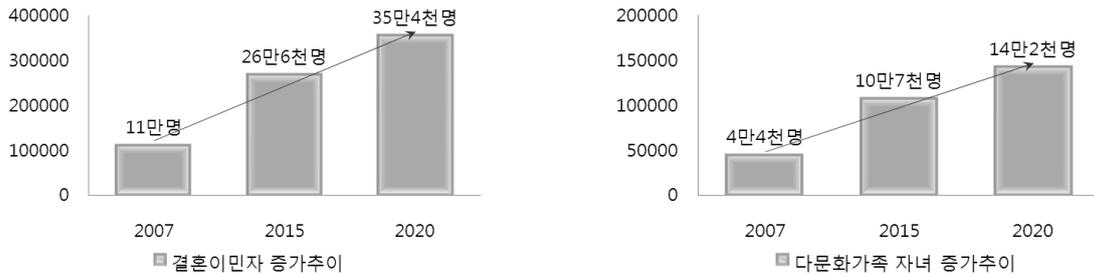
2) 외국인주민 자녀 중 6세 이하가 64,040명, 만 7-12세 이하가 28,922명으로 외국인주민 자녀의 8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2세의 미취학률은 24.5%(전체평균 3.6%)로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0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국가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인종 차별 문제와 관련, 조사 대상 55개 국가 중 5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07년 7월 한국에게 단일 민족에 따른 인종 차별주의 철폐를 권고, CERD는 '한국의 단일민족 강조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순혈, 혼혈 같은 말도 인종 우월주의를 드러낸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 격차 또는 교육 격차와 맞물려 사회통합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전반의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UN은 2050년 한국 인구의 13.9%가 이민자와 그 후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1>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추이(설동훈, 2008)



따라서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기회와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사회통합과 공동체의식 제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2. 정부정책 현황 - 부처별 정책 현황

현재 다문화정책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는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5조의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총리실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통해 의결하게 되어 있다.

‘외국인 정책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30명 내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 적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문화정책 지원 관련 부처들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부의 7개 부처가 있다.⁴⁾ 법무부는 외국인과 다문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부처들은 특정 분야의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 이 외에도 농촌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선 농림부가 있고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도 넓은 의미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 및 재외동포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다문화정책 관련 중앙부처 범위에서는 제외한다.

부처별 업무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⁵⁾

<표 2>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업무의 내용

부처 및 담당부서	업무내용	비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 다문화의 이해증진에 관한 시책 	정책총괄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추진 ○ 다문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지원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촉진 방안연구 	지자체 외국인주민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정 (사회서비스적 성격 강함)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 문화적 지원사업 추진 ○ 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 여성 대상 언어교실 운영 	외국인주민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 추진 	다문화가정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고용 관리 ○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관리 ○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외국인근로자
여성부 권익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폭력 등 피해여성 보호·지원 	결혼이주여성 인권

한편, 중앙부처 다문화 관련 IT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사업과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IT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는 편이다. 물론 지자체, 시민·종교단체 등에서 일부 다문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 다문화사회, 공동체사업의 추진성과와 방향(김성희, 2009).

<표 3> 중앙부처 다문화 관련 IT업무의 내용

부처 및 담당부서	업무내용	비고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사업 - 정보화교육 운영지원, 온라인콘텐츠 및 교재 개발·보급, 조사연구 등	한국정보화 진흥원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센터 사업은 필수사업, 특화사업, 공통사항으로 구분되며, 이 중 특 화사업(다문화가족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정보화교육 일부 실시	전국다문화 가족사업 지원단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계획('09.7)에 의거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중 가족 단위 한글·정보화교육 실시 ※ 특별교부금으로 '09년 하반기 한시적 지원	
기타	○ 한국디지털대학교 다문화가정 e배움캠페인 (http://e-campaign.kdu.edu/) - 컴퓨터 기본교육, 한국어, 문화 교육 ○ 강원도청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http://www.kwfamily.or.kr/korean/) - 교육프로그램, 사이버공부방 등 제공	

3. 다문화사회에서 IT활용의 중요성

정보사회의 발달에 따라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즉 정보빈자(have-none) 간의 정보격차가 주요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세계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격차 및 정보빈자는 사회문제로서 그에 대한 정책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지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격차 및 정보화교육에 대한 정책은 1980년대부터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초기의 정책은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정보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4년 인터넷이 상용화 되면서 급격하게 보급되어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초고속인터넷으로 발전하면서 정보격차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서 정보화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왔다. 특히 정보화 확산을 위해서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은 필수 불가결하였다.

정부는 정보화를 통한 개방적·수평적·분권적 사회가 형성되는 가운데, 신체적, 사회적 특징 등에 따른 정보화 수준 차이가 각종 기본권 향유 차이를 고착시켜서는 안된다는 인식하게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수립하여 많은 성과를 보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해 온 국민정보화교육 정책⁶⁾은 정보화확산의 중요한 정책이었다. 2000년 1단계에 이어 2005년 3단계 국민정보화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 확산율이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정보사회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모바일이나 유비쿼터스 등 새로운 정보기술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정보격차 개념 및 그에 따른 국민정보화교육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정보화 능력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되고 있으며,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할 때,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사회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지금의 한국사회와 같은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관계와 소통을 유지해 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변종임 외, 2005).

이러한 한국사회에 이주하여 살아야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정보화교육은 한국어교육 만큼이나 한국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며 타인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인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신국 및 학습환경이 매우 다양하여 많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그들 출신국의 정보화 실태는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 2008년 말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전체국민의 PC 보유율은 80.9%, 인터넷 이용률은 77.1%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6) 국민정보화교육 중장기 정책 연구(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1000만 정보화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1단계 사업은 정보화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이었으며, ‘2단계 정보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착수한 2단계 사업에서는 실용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였고, ‘디지털 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3단계 사업에서는 새로운 정보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교육을 추진해 나갔다.

<표 4> 단계별 국민정보화 교육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명	1,000만명 정보화교육	2단계 국민정보화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목표	인터넷 이용 확산 (인터넷 이용률 제고)	정보 활용 촉진 (인터넷 이용률 제고)	생산성 향상 (삶의 질 제고)
대상	전 국민	전 국민	취약계층
기간	2000 - 2002. 6	2002.7 - 2004	2005-2008
주요정책	CYBER KOREA 21	e-KOREA VISION 2006	Broadband IT KOREA Vision IT 839 전략
추진수단	정보화교육 (대규모 집합교육)	정보화교육 (집합/온라인 교육)	정보화교육 (집합/방문/온라인 교육) 부처/지자체 교육지원
대표사업	주부 인터넷 교육 우체국정보교육센터	e-KOREAN 교육 여성 e-biz 교육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교육인프라 지원

정보화 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IT 수준은 매우 기초적이거나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아 언어 소통이 어려운 비문해자 뿐만 아니라 정보 활용능력이 부족한 정보문해자로서 우리사회의 정보소외 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⁷⁾ 새로운 정보격차 해소의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의 정보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대부분 한국의 정보화에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자아향상은 물론이고,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정보문화에 적응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수의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와 한국문화에 통합될 것을 강요하는 폐쇄적인 가족 구조하에서 제한적인 한국문화와 한국사회를 만날 뿐이다. 정보화교육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식을 통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보다 쉽게 적응하며,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다문화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취업의 욕구를 갖고 있는 현실에서 IT능력이 향상된다면 이를 통해 현재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결혼이민자 일자리 갖기가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정보화 능력개발은 일자리 갖기를 비롯한 이들의 현실적인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뿐 아니라 자긍심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런 문제인식하에 2006년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비문해자정보화교육사업⁹⁾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사회에서 한글학습 및 정보기술 습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능력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기술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계층 간, 부문 간 정보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 각 계층 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는 정보화의 투자효과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물론, 기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새로운 사회비용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격차는 정보접근격차나 정보이용능력의 격차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보활용격차는 기존의 전통적인 격차와는 다른 수준에서 확대될 여지가 크다. 또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격차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최두진·김지희, 2004)

8)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 (복지부, 2005).

9) 비문해자 정보화교육이란 비문해자의 한글 문해 능력과 정보 능력 향상 및 정보기기를 활용한 능력향상 등 국민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초교육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비문해자들에게 정보화교육을 통해 문해 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 활용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며, 다시 ICT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문해교육과 정보화교육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국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초 교육으로 국민의 일상성의 획득을 위한 정보사회에서 참여와 연대,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기초교육을 포함한다(변종임 외, 2005).

지난 4년간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정보화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자신감 향상과 학습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¹⁰⁾

이처럼 이들에게 우리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정보 활용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격차해소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보화정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정보화 현황조사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II. 그간의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 지원정책 현황

-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는 지난 2006년 4월 국정과제 회의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에도 뿌리 깊은 '순혈주의'로 인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 차별이 심화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비,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10)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년 국민정보화교육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화교육 서비스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종합만족도는 86.2점(100점 만점환산 점수, 50점 = 보통)으로 나타나, '매우 만족'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며,
→ 이는 정보화교육 서비스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긍정적 요인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 정보화교육 서비스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이미지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교육 수강 전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정보화교육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 증대(89.5%)'라는 측면의 긍정적 성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정보화교육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참여의지 확대와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한 생산적인 정보활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 다음으로 '정보화에 대한 자신감(87.0%)', '정보검색 및 활용능력 향상(85.5%)', '다른 분야나 계층에 대한 정보습득(83.0%)' 순으로 인식변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종합대책은 12개 관련부처가 총 7개 과제¹¹⁾, 27개 소과제를 분담 시행, 여성가족부(현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해 다음의 계획을 발표하여 추진하였다.

- 출신 국가별 한국어교재(언어별·진도별) 개발 및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 제작, 양국어로 된 문화 이해 프로그램 개발(※ '05년 6만부(10개 언어)→'06년 4만여 부(스리랑카, 미얀마 등 7개 언어))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최신 정보 제공
- 동일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간 네트워크를 관련부처(여가부·법무부·지방자치단체)와 연계·구축하여 사회적응과 관련한 조언과 정보교환 지원('06.7)
-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 활용역량 제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은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과제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문자교육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기초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해 ICT 활용능력 습득을 통해 문해는 물론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 지식정보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¹²⁾

11) 7개 과제 :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조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12)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단체를 통하여 정보화 교육 실시('06-'08)(PC 등 교육기자재와 강사, 인터넷, 교재 등을 지원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시범교육과 연구조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전문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07)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표 5> 개별 정책 요약¹³⁾

정책명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추진기관	부처간 공동추진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추진년도	2006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피해의 예방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간 갈등, 지원체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부적응 심화 - 자녀교육 측면의 문제점 해소 - 국적취득을 위해 심각한 가정폭력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발생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극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정책은 제한적인 문화·교육·복지서비스에 한정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를 방지할 경우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전망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 →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결혼이민자(협의) ○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광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현황 및 특성 분석(실태조사)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형성과정의 문제점 도출(분석결과) ○ 외국의 관련 정책사례 비교분석 ○ 탈법적인 결혼중개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 정착을 위한 가이드북의 다국어 편찬 및 정보화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실시 ○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 지원, 건강복지 지원
특이사항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여성과 국제결혼에 중점을 두어 보다 명확하고 밀도있는 정책을 제공 ○ 외국의 정책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 ○ 부처 간 협의적 성격을 갖고 있어, 부처별 세부 정책의 이상적인 근본원리로 작용

13)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분석 연구(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08).

1. 정보화교육 운영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은 2006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초기 정보화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문해교육기관, 민간단체, 야학, 종교시설 등 정보화교육 수요가 많은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교육장을 구축하고 강사비와 인터넷회선 사용료, 교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육기관 선정은 연초 사업공고를 통해 희망교육기관을 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선정된 교육기관에는 PC, SW, 빔프로젝트, 프린터, 기자재, 네트워크 등 교육환경 일체를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다문화 정보화교육사업을 발굴·지원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교육기관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역 결혼이민자의 정보화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표 6> 연도별 지역별 교육기관 운영현황(개소수)

연도\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006	2	1	1	1	1	-	-	2	1	2	1	2	-	-	-	1	15
2007	3	2	1	-	1	1	-	4	2	3	-	3	1	1	1	1	24
2008	3	2	1	-	1	1	-	4	2	4	-	3	1	1	1	1	25
2009	2	3	4	-	-	1	-	7	2	3	-	2	2	2	-	1	29

2. 정보화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문자 해독 능력과 해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관계로 국내 성인 비문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정보화 교재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전용교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7년 하반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보화교육 교재 「컴퓨터·한글기초」 「인터넷 기초」 2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게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보화교육 전용교재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효율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교육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과정별 2개월 씩 총 4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재는 성인 비문해학습자용 교재의 학습내용 중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사례별로 선정, 과정별 특화된 커리큘럼을 기획하였다.

특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교육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원에 적용한 예제는 재미있고 실생활 활용도가 높은 소재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기초 이후의 심화학습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결혼 이민자들의 학습에 지속적인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 과정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활용교재 역시 생활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육아와 자녀학습, 실생활 활용도가 높은 소재를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교재의 실용성을 높이고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전용교재



<컴퓨터·한글 기초>

<인터넷 기초>

<인터넷 활용>

<표 7>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전용교재 구성

교육대상	교육과정	수준	교육목표 및 내용
결혼이민자	컴퓨터·한글기초	기초	컴퓨터를 켜고 끄기부터 시작하여 아이콘을 클릭하는 정도의 이용만으로도 자판을 익히고 타자연습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둬 '한글 2005'라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고, 간단한 편집 작업으로 우리글 꾸미기를 해보는 내용으로 구성
	인터넷 기초	기초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을 직접 사용해보고 출신국별 폰트를 다운받는 방법을 습득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전자우편을 주고받고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여 생활에 활용하는데 중점을 둬
	인터넷 활용	중급	육아 및 자녀 학습에 도움이 되고 학습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실생활 활용도가 높은 소재 및 캐릭터로 내용 구성 인터넷 활용교육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사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

한편,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습속도가 느리고 쓰기 부분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기초교재 중에서 한글과 인터넷의 내용을 기반으로 여성결혼 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콘텐츠 2종을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된 콘텐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한 Blended learning 과정으로, 오프라인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전천후 사이버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3. 조사·연구

가.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2006)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용으로 활용되었던 초기 교재는 국내 비문해자를 위한 교재로써 한국인 대상으로는 그 효율성이 탁월하나,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외국어 비문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이 시급히 요청되었으며, 이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효율적인 전략 모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당시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하게 되었다.

나. 다문화가정 정보화지원을 위한 정책조사 연구(2008)

현재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습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문해 능력 문제는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의 문제를 넘어 자녀 교육문제로 이어지는 가족문해(Family Literacy)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정의 정보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사회참여활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의 계층별 사회참여 수요, 분야, 유형분류 등을 연구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화교육 정책 및 신규 사업영역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4. 홍보 및 인식제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정보화수준 향상과 정보화교육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 정보화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정보화백일장은 전국 규모의 IT경진대회로 크게 정보화백일장과 어울림한마당으로 구성된다.

정보화백일장은 대회 당일 현장에서 주어진 글제를 보고 컴퓨터(한글 프로그램)를 이용해 정해진 시간 내에 글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정보화백일장이 끝나면 2부 행사로 다채로운 축하공연과 대회 참가자 및 가족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이어지며, 대회 당일 채점결과를 공개하여 시상식을 진행한다.

올해로 4년차인 본 행사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상당히 빠르게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다문화가족 정보화백일장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를 ‘2009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으로 위탁, 2009년 현재, 전국 119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¹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사업영역은 크게 필수사업과 특화사업 공통사항 3가지로 구성되며, 정보화교육은 특화사업(다문화가족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년 21개소 → '07년 38개소 → '08년 80개소 → '09년 119개소

<표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개요

필수사업	특화사업	공통사항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자조집단	정서지원 다문화가족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전문인력양성	홍보 네트워크 구축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협의체 구성 및 활동

Ⅲ.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 지원방향 및 내용

1. 정책환경 및 외국사례 분석

가. 정책환경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문 연구·개발 수행자료 축적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운영 성과 축적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온·오프라인 콘텐츠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정보화교육 관련 예산 부족 ■ 다문화가족 정보화현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 분석 및 유형별 접근 부족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수 지속 증가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자체, 연구기관, NGO 등 사회적 인식 공유 및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간,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및 연계체제 확립 미흡 ■ 다문화 정보화지원에 대한 마스터플랜 미비 ■ 정책성과의 계량화 어려움

나. 외국의 다문화교육 정책 비교¹⁵⁾

1) 미국

□ 배경

미국은 처음부터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형성된 국가로 다문화정책의 중요성이 초기부터 강조되어왔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남

15) 외국사례는 「다문화교육 정책 국제 비교 연구」(2008,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미지역의 히스패닉계 유입 증가로 다문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사회 주류를 형성했던 영국계 백인들이 백인 청교도 문화를 전수하는 이른바 '용광로 이론'에 의한 동화주의적 정책이 기초를 이루었으나 인종적차별의 심화로 사회 통합에 실패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민자수가 급증하고 특히 1960년대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샐러드 볼 이론'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다원주의로 정책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 현황

미국의 다문화정책은 연방정부는 큰 틀에서 입법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각 주정부는 주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원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 정체성 유지와 보존을 돕는 기구와 정책들이 특징적이다. 미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은 크게 소수자 정체성 보호와 미국사회 적응교육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최근 다문화 교육정책은 인종 중심 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 시사점

NCLB(No Child Left Behind Act)법, EVEN START 프로그램 등 최근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들은 소외계층 학생의 학력증진, 교육기회 평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문화의 문제가 결국 계층별 격차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다문화 교육정책의 한 축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2) 호주

□ 배경

호주는 초기 반인권적 원주민정책과 백호주의를 통해 동질성의 신화를 고수하고 있었으나 2차 대전 이후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주의로 정책방향이 변화해왔다.

□ 현황

70년대 이후 다문화적 다양성이 사회적 위협이 아닌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시각하에 이민-시민권부를 중심으로 정착지원, 언어지원, 시민성 강화, 문화적 다양성 증진 등 체계적인 다문화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호주 역시 주별로 다양하게 특성화된 다문화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언어관련 정책과 문화간 이해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시사점

호주는 주별로 다양하게 특성화된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언어 관련 정책과 문화간 이해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동화주의적 다문화 정책으로 급선회하여 문화다양성보다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정책

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캐나다

□ 배경

캐나다는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민들의 조화로운 통합을 건국 초기부터 고민해왔고 서부지역 개발을 위한 강력한 이민유치 정책의 결과 이민자들의 문제까지 더해져 다문화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나라다.

□ 현황

소수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문화유산부를 중심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강력히 지원하여 '모자이크 다문화주의'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원주민 교육, 이민자 대상 교육, 반인종주의 교육 등을 중심으로 주별로 다양한 다문화 교육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시사점

최근엔 이러한 다문화 정책이 분리와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4) 영국

□ 배경

영국은 국가 자체가 4개국의 연합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대전 후 노동력 충당을 위해 이민을 적극 수용하면서 다문화적 사회로 급속히 변모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제도가 뒤따르지 못해 혼란을 겪었으며 '잡동사니 사회'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 현황

초기에 동화주의적 지향을 보이던 다문화 정책은 60년대 이후 영국 특유의 자유주의적 전통에 입각하여 다문화주의로 선회하였고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런던 테러로 인해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책상의 제스처어만 있었을 뿐 영국민들의 진정한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시사점

미국과 비슷한 저소득층 교육 복지 프로그램인 슈어 스타트 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 가이드북 발간 등이 대표적인 다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5) 프랑스

□ 배경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은 18세기 후반 나폴레옹 전쟁 이후 약해진 국력을

인구증가를 통해 해결하려던 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이민이 증가하면서 이루어졌다. 60년대 이후 시작된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프랑스적 용광로'라고 불리우는 동화주의적 기조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단편적인 정책들로 동화주의적 통합에 한계가 드러나자 70년대 이후 이른바 '공화국 통합모델'이라는 강력한 동화주의적 정책을 추진했다. 공화국 통합모델은 이민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소외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폭력이나 불법체류 등의 문제에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 현황

이러한 동화주의의 일변도의 정책은 강한 반발을 가져왔으며 히잡 사건과 무슬림 소요 사태 등으로 표출되며 프랑스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우선지역을 선정하여 기초 학력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통합에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 시사점

독립적인 다문화 관련 기관을 지정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지만 여전히 다문화 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6) 네덜란드

□ 배경

네덜란드는 2차 대전 이후 이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였는데, 특히 이슬람계 이주민은 그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이질적 성격이 강했고 낮은 교육수준으로 다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60년대 이전까지는 네덜란드 특유의 지주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관용을 원칙으로 이민자들의 공동체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 내부에서 지주제가 붕괴해가고 이슬람계 이주민들의 집단만은 동화를 거부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자 상호 배척과 차별이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 현황

네덜란드는 수동적인 동화보다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이주민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90년대 이후 동화주의적 성격으로 변모하면서 1998년 이주민 통합법을 제정하고 12개월짜리 이주민 동화교육을 실시하고 이주민 테스트 정책까지 시행하는 등 동화주의적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 시사점

네덜란드식의 다문화주의는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에 비해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자유주의적 전통은 이주민들의 문화와 전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했다기보다, 주류 집단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을 하지 않는 형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의 공존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정책은 피상적인 다문화주의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

7) 중국

□ 배경

중국은 외국인의 유입이 많았던 국가는 아니지만 한족 이외에 크고 작은 55개의 소수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로서 이러한 소수민족들에 대한 지원과 공존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문화정책이 시행되었다. 근대 이후 중국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문화혁명기 등 일시적으로 민족자치체가 부정된 적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소수민족을 제압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국내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수민족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문제로 꾸준히 각각의 민족들이 거주지역에서 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보장되어 왔다.

□ 현황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소수민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해당 민족언어의 보존, 의무교육 보장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 문화의 영역에서 소수민족의 자율적 관리를 보장하고 있다.

□ 시사점

중국이 매우 강력하게 각 민족집단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성공적으로 국가적 통합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 일본

□ 배경

일본은 50여개의 소수민족이 공존하고 있고 외국인의 숫자도 적지 않지만 근대 이후 단일민족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다문화 정책도 그리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다.

□ 현황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다문화정책은 주로 국제화 정책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일본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록법, 입관법 등 정책적 폐쇄성을 보여왔다. ‘다문화공생’이라는 개념 하에 진행되는 일본의 다문화 정책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일종의 행정서비스 개선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제이해교육의 경우도 구미 편중과 아시아 경시라는 문제가 일부 나타났다.

□ 시사점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교사 채용과 유학생 수용, 장학금 지원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문화 공생 교육이 언어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9) 인도

□ 배경

인도는 역사적으로 무수한 민족들이 이주해와 민족, 인종, 종교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카스트제도를 바탕으로 한 신분에 따른 차별화, 빈부의 격차, 도농간의 격차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찍이 다문화적 전통을 가진 인도에서는 교육정책 자체가 다문화적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너무 많은 언어와 민족으로 인해 언어정책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영어가 국가의 공용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 공용어도 18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공용어로 지정되기 위해 소수민족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작용하고 있다.

□ 현황

인도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이미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다문화적 자산들을 현대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시사점

언어를 둘러싼 민족적 갈등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정책 과정에도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싱가포르

□ 배경

싱가포르는 영국 식민주의 유산과 이민사회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형성되면서 민족을 통한 사회적 분류를 시도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현황

다인종주의를 바탕으로 인종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현행 인구구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CMIO 모델과 이중언어교육 정책 하에 중립어로서 영어를 선택하게 하는 정책으로 싱가포르는 기타인(백인)-중국인-인도인-말레이인의 계층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시사점

다인종주의에 의한 CMIO 정책은 민족 간의 충돌을 완충하는 효과는 가져왔으나, 이질적 문화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은 일부분 포기했으며 인종에 따른 계층화는 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문화교육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정책에서 영어 사용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는 현상은 다문화적 지원정책이 자칫 차별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이주배경 및 역사, 다문화 현상의 양상이 다르므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여러 나라들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은 동화주의와 다양성 강조의 양 극단에서 다문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 정책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다양성을 통한 통합의 시도일 것이다. 즉, 호주에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다양성이 사회적 분열의 징후라기보다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를 통해 다문화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부처간 협의·조정, 중앙-지방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다문화 정보화지원에 대한 중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문화 구성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가. 정책목표

- ICT를 통한 다양한 사회 통합프로그램 참여로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사회통합에 기여
- ICT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 및 u-사회의 보편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직업개발 및 경제생활 촉진에 기여
- 외국인주민 급증에 부응한 사회적 관심 제고

나. 추진전략

- IT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학습단계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 사업 추진기관간 역할 분담 및 지역기관 연계 강화

3. 주요 정책과제

가. 다문화 정보화교육 기반 구축

현재 29개의 교육기관은 결혼이민자의 거주비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경험이 풍부한 지역밀착형 기관을 중심으로 기 구축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의 접근, 이용, 생산이 가능한 다문화 디지털 정보이용센터를 구축, 포괄적인 다문화 정보화서비스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부처, 지자체, 이주자 지원 단체 등 각각의 전달체계를 통한 교육기관과 과정을 네트워크화 하여 정보와 운영현황 파악, 강사 풀 공유, 현장 중심의 지원대책 피드백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ICT를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 익숙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민정보화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교육기관의 전문과정을 이수하거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ICT를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편적인 사회적 기회 및 일자리 제공 등 우리사회 경쟁력 제고를 강구해야 한다.

다. 다문화 정보화 실태조사 및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발간하는 국가정보화백서나 정보격차·정보문화백서, 국민정보화교육 실태조사, 복지부의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사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 등의 정보이용 현황 파악, 정보화 관련 지표개발 및 관리를 추진하고, 인터넷이용률 등 정보화 실태의 연간 변화추이를 측정하여 다문화 정보화 정책의 목표 수립 및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라. 다문화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위해 표준화된 정보화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ICT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정보화수준 제고를 위해 대상별·수준별 교재 및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마.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

다문화 정보화백일장 등 전국 규모의 IT경진대회 및 다문화사회 정보포럼 개최를 통해

다문화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IV. 맺음말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내외 환경 및 ICT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선진지식정보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인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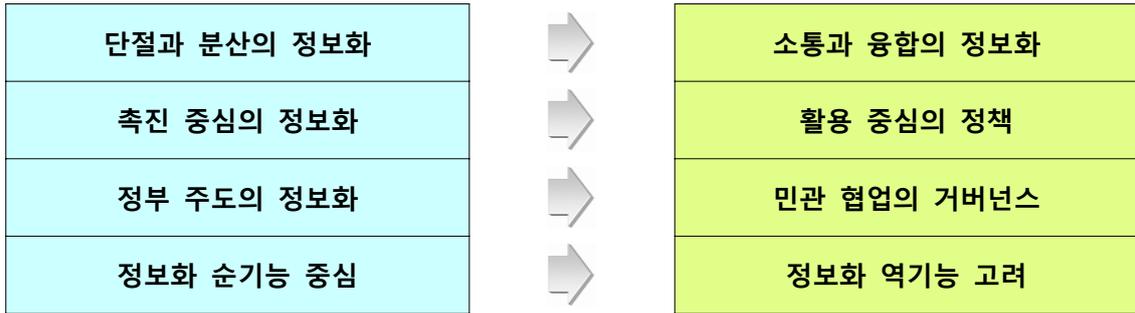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정보화’와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을 통한 ‘신뢰의 정보화’가 정보사회를 지식정보사회로 선진화시키는 원동력으로 파악하여,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소통과 융합,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추진전략으로 아래와 같이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활용 중심의 정책,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정보화 역기능 고려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표 9> 국가정보화 비전과 목표



<표 10> 국가 정보화 추진전략



<표 11> 국가정보화 목표

구분	목표	내용
2대 엔진	창의적 소프트파워	사회 변화의 엔진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국가 성장의 엔진
3대 분야	신뢰의 정보사회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사회 안정성 제고
	일 잘하는 정부	힘과 벼이 되는 생활 속 디지털 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생활 속, 산업 속의 ICT

사회통합과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특히, 최근 국제적 인적교류 확대, 국제결혼 증가 등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화 실태에 대한 전문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초 정보화생활을 위한 교육마저 미미한 실정이다. 사회통합이 지연되어 사회적 문제 야기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의 증가 등 다문화가족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전반의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사회·경제적 부담과 기회의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신감 향상과 학습에 대한 욕구 증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에 기초하여 정보기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정보 및 문해능력의 실질적 향상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이 건전하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사회통합의 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대상별 특성화된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내용의 질을 확보할 계획이다. IT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을 기반으로 생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 콘텐츠 및 수준별 심화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및 교육매뉴얼을 개발하여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표준화는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시급히 진행하여야 한다.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이들은 단순히 정보격차해소의 지원대상이 아니라 다문화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시민으로 인식하고 한국사회를 보다 풍부하게 할 인적·문화적 자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보화 지원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사회가 확산됨에 따라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대되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및 그 자녀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 형성 후에도 구성원간 언어·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자녀의 학교·사회생활 적응 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전반의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부터는 범 정부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직 분산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지역별, 서비스별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IT를 활용한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프로그램은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ICT 교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자격증 교육과 직업훈련 교육 제공, 지역 및 가족단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지식정보화사회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개발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주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교육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 형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전통적인 집합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이면서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은 교육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교육과는 그 형태나 대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가족과 사회의 안정적 토대 구축 및 글로벌 인재육성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미래발전전략 수립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ICT를 활용한 다문화가족 정보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화교육 정책 지원방안

박 영 식 부장 (yspark@nia.or.kr)

2009. 12. 8

한국정보화진흥원

목 차

I 들어가며

II 그간의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 지원정책 현황

III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 지원방향 및 내용

IV 맺음말

I 들어가며

I 현황

II 정부정책 현황 - 부처별 정책 현황

III 다문화사회에서 IT 활용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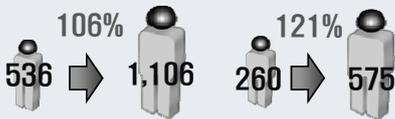
1. 현황

외국인 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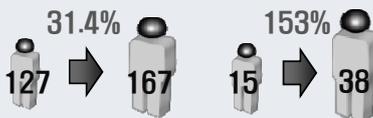
국가간 인적교류 증가 현황

최근 3년간('07 - '09)

외국인주민(천명) 외국인근로자(천명)



결혼이민자(천명) 국제결혼(천건)



국제교류 증가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속 진전

여러 유형의
혼혈인과
이주자 증가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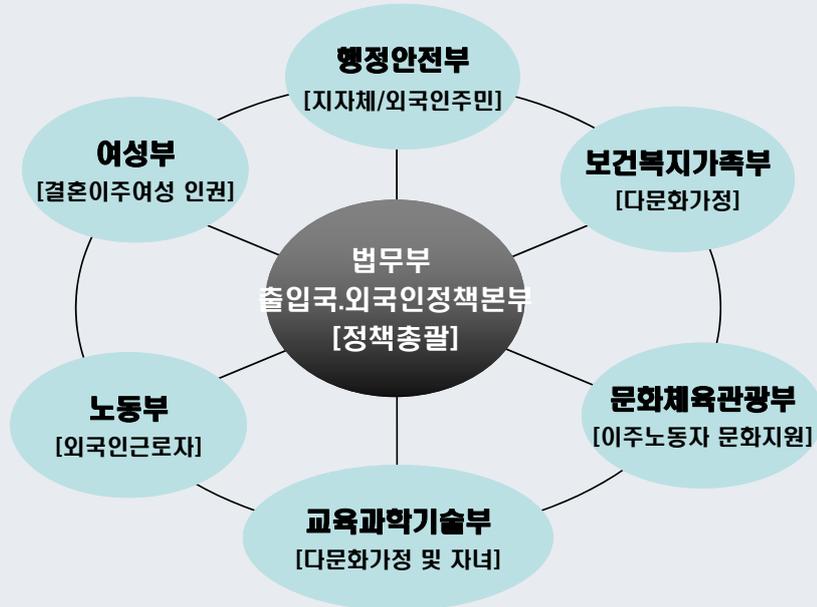


사회적 관심제고와 시책추진 필요

● 정부정책 현황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5조에 의거
5년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업무 내용

< 중앙부처 다문화정책 업무 내용 >

담당부처	업무 내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 조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 다문화의 이해증진에 관한 시책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 시책추진 ○ 다문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지원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촉진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원 ○ 외국인 및 노숙자 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노동자 문화적 지원사업 추진 ○ 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 여성 대상 언어교실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수립 추진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고용 관리 ○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관리 ○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지도.점검
여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폭력 등 피해여성 보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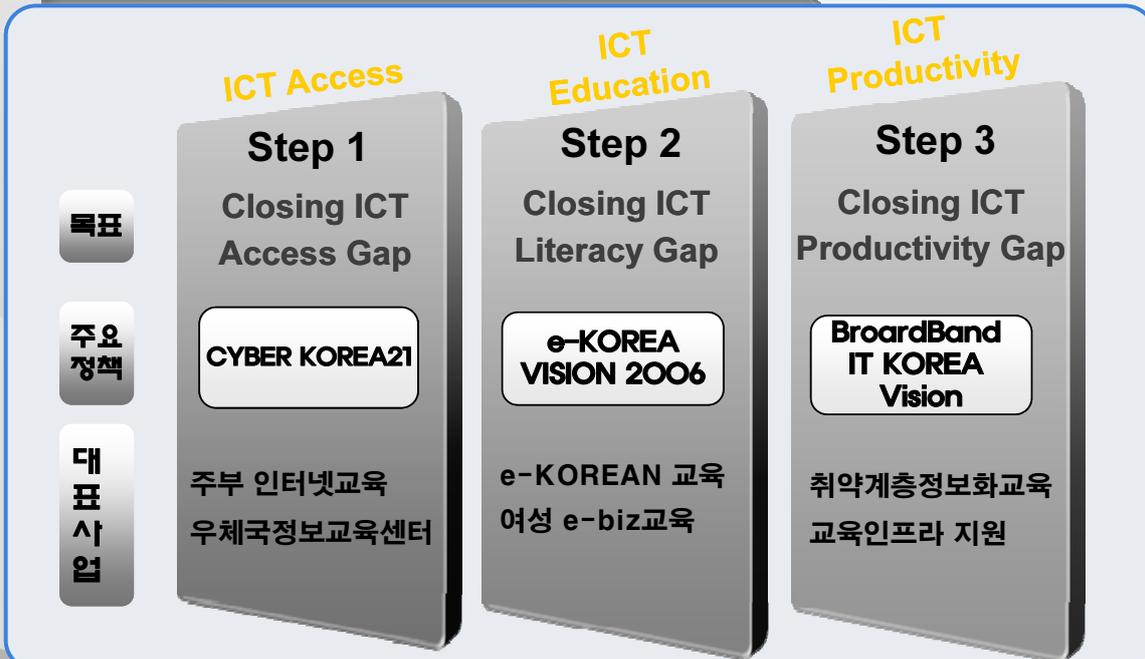
● 중앙부처 다문화관련 IT 업무 내용

< 중앙부처 다문화관련 IT 업무 내용 >

담당부처	업무내용	비고
행정안전부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사업 - 정보화교육 운영지원, 온라인콘텐츠 및 교재 개발·보급, 조사연구 등	한국 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센터 사업은 필수사업, 특화사업, 공통사항으로 구분되며, 이 중 특화사업(다문화가족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정보화교육 일부 실시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단
교육과학기술부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계획('09.7)에 의거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중 가족 단위 한글·정보화교육 실시 ※ 특별교부금으로 '09년 하반기 한시적 지원	
기타	○ 한국디지털대학교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http://e-campaign.kdu.edu/) - 컴퓨터 기본교육, 한국어, 문화 교육 ○ 강원도청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http://www.kwfamily.or.kr/korean/) - 교육프로그램, 사이버공부방 등 제공	

▶ 정부차원의 다문화관련 종합적인 IT지원정책 부재

● 우리나라 정보격차 및 정보화교육 정책 &



● 정보화 환경 변화(4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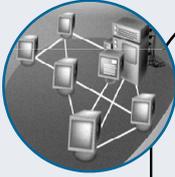


● 정부별 정보화 패러다임

패러다임		국민의 정부 ('98 - '02)	참여정부 ('03 - '07)	이명박 정부 ('08 - '12)
Cyber Korea	온라인	기반 구축 →	정보화 촉진 →	서비스 확산 →
e-Korea	인터넷			
u-Korea	유비쿼터스			
k-Korea	지식			

- **新사고** : 지식의 소통과 공유에 기반한 창의적 新사고
- **新경제** : 산업의 경계가 없는 융합의 新경제
- **新문화** : 건전하고 성숙한 신뢰의 新문화

● 다문화 사회에서 IT활용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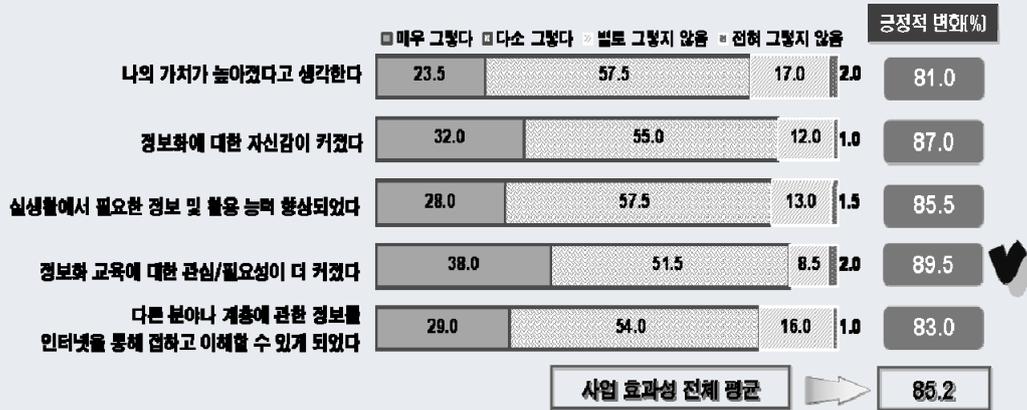


-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는 관계와 소통을 유지해 주는 통로
- 결혼이민자에게 정보화교육은 한국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며 타인과 소통하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의 방법
- 결혼이민자는 정보활용능력이 부족한 정보문해자로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을 형성
- 정보화교육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응, 소통 가능
- 결혼이민자의 정보화능력 개발은 일자리 갖기를 비롯한 현실적인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
- 이는 한국사회 적응 뿐 아니라 자긍심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

● 정보화교육의 성과



- 정보화교육 수강 전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범위가 확대
- 정보화교육을 통해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 증대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년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정보화교육의 성과

정보화교육 성과

- 정보화교육이 여성결혼이민자 정보격차해소에 긍정적 요인으로 기여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이미지로 정착
-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참여의지 확대
-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 생산적 정보활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기대

II

그간의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 지원정책 현황&

I

사업 추진 과정

II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과정

'06. 4월 범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대책> 수립·추진

- ▶ 12개 관련부처가 총 7개 과제, 27개 소과제를 분담 시행, 여성가족부(현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총괄 수행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요약) >

정책명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추진기관	부처간 공동추진
추진년도	2006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피해의 예방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극적 통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 →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추진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주요내용 (7개 과제)	○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조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
특이사항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여성과 국제결혼에 중점을 두어 보다 명확하고 밀도 있는 정책 제공 ○ 외국의 정책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 ○ 부처 간 협의적 성격을 갖고 있어, 부처별 세부 정책의 이상적인 근본원리로 작용

● 사업 내용

정보화교육 운영 지원

- ▶ '06년부터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기초 및 실용교육 실시
- ▶ PC, SW, 빔프로젝터 등 교육용 기자재와 운영비 지원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전용교재 3종 개발 및 보급 (컴퓨터·한글 기초, 인터넷 기초, 인터넷 활용)
- ▶ 온오프라인 학습이 가능한 Blended Learning 과정 2종 개발 (컴퓨터·한글 기초, 인터넷 기초)



사업 내용

조사·연구

- ▶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2006)
- ▶ 다문화가정 정보화지원을 위한 정책조사 연구(2008)

홍보 및 인식제고

- ▶ '06년 부터 IT경진대회인 다문화가족 정보화 백일장 개최



홍보 및 인식제고







본 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총 100여 명의 인재를 선발하여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번길 10 (삼성동)에 위치한 본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100여 명의 인재를 선발하여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번길 10 (삼성동)에 위치한 본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100여 명의 인재를 선발하여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번길 10 (삼성동)에 위치한 본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총 100여 명의 인재를 선발하여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번길 10 (삼성동)에 위치한 본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100여 명의 인재를 선발하여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번길 10 (삼성동)에 위치한 본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총 100여 명의 인재를 선발하여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번길 10 (삼성동)에 위치한 본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100여 명의 인재를 선발하여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번길 10 (삼성동)에 위치한 본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II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 지원방향 및 내용

I

정책환경 및 외국사례 분석

II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III

주요 정책과제

● 정책환경

강점(Strength)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문 연구.개발 수행자료 축적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운영성과 축적
-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온.오프라인 콘텐츠 보유

약점(Weakness)

- 다문화 정보화교육 관련 예산 부족
- 다문화가족 정보화현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분석 및 유형별 접근 부족

기회요인(Opport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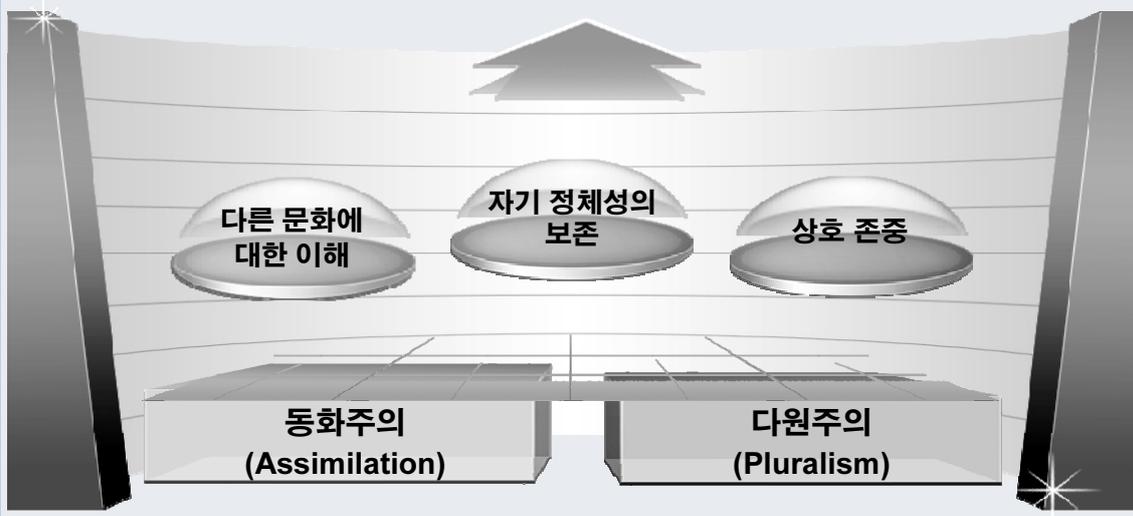
- 외국인주민 수 지속 증가
-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자체, 연구기관, NGO 등 사회적 인식 공유 및 관심증대

위협요인(Threat)

- 부처간,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및 연계체제 확립 미흡
- 다문화 정보화지원 마스터플랜 미비
- 정책성과의 계량화 어려움

● 외국의 다문화 교육정책 &

다양성을 통한 시민적 통합



2.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정책목표

- ICT를 통한 다양한 사회 통합프로그램 참여로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사회통합에 기여
- ICT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 및 U-사회의 보편적 기본권 보장
- 외국인주민 급증에 부응한 사회적 관심 제고

추진전략

- IT를 매개로 하는 다양한 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학습단계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강화
- 사업 추진기관간 역할 분담 및 지역기관 연계 강화

3. 주요 정책과제

● 주요 정책과제



다문화 정보화교육 기반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결혼이민자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의 접근, 이용, 생산이 가능한 <다문화 디지털 정보이용센터> 구축
-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기관 육성

● 주요 정책과제 &

✓ ICT를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대상별, 수준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과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보편적인 사회적 기회 및 일자리 제공 등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 다문화 정보화 실태조사 및 연구

-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보이용현황 파악, 정보화 지표개발 등 추진
- 다문화 정보화정책의 목표수립 및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 마련

● 주요 정책과제

✓ 다문화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대상별·수준별 표준화된 정보화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

- 다문화 정보화백일장, 포럼 등 개최를 통해 다문화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

IV 맺음 말

● 국가 정보화 비전과 목표 &

국정 비전

정보화 비전

목표
(3대 분야 2대 엔진)

추진 전략



- 정부주도의 정보화
- 단절과 분산의 정보화
- 정보화 순기능 중심
- 축적 중심의 정책

- 민관 협업의 거버넌스
-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 정보화 역기능 고려
- 활용 중심의 정책

- ✓ 사회통합과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보격차해소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 앞으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사회경제적 부담과 기회의 양면성 동시 내포

- 정보화교육에 있어 이들은 단순한 정보격차해소 지원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민으로 인식하고 인적·문화적 자원으로 파악
 - ▶ 대상별 특성화된 정보화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 정보화 지원체계 마련

감사합니다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 포럼: 다문화가정의 정보 활용

2부. 사례 발표

“이주민 정보화교육 현황과 대안”

문종석 푸른시민연대 대표

“올리볼리 그림동화”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실장

“연천군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사례발표”

경호연 연천군청 담당자

[사례 1]

이주민정보화교육 현황과 대안

문 종 석

(푸른시민연대/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대표)

1. 들어가며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IT(情報技術, information technology)강국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보의 정확한 개념이나 세부적 규정통일 조차도 잘 안되어 있어,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정보’ 라는 원래의 개념에서부터 온라인, 즉 컴퓨터단말기로 지칭되는 정보를 활용하기위한 말초적인 도구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는 다양한 정보로 이루어진 정보사회이다. 사람은 결국 이러한 정보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계층적 구조가 나누어 질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격차’ 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까지 마련되어있을 정도로 정보를 바라보는 계층 간의 요구와 해결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망라해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를 접하고 생활에 직접 활용하기까지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한다. 즉, 정보라는 것이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이니 활용하라”** 라는 단순명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라는 것이 있듯이 무한대로 생산되는 정보를 우리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이를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키기기 위한 단계적 노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 중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함께 정보의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방법을 지원하고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격차는 결국 다양한 정보를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새롭게 정리하고, 이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방법과 이를 활용하는 기법까지 사회로부터 세부적으로 교육받고 훈련 받아야하는데,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이주민들이나 그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다문화사회가 추상적이지만 ‘행복한’ 얼굴을 갖게 되려면 결국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경제, 사회, 문화의 격차가 줄어들어야하고, 특히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대하는 환경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지 이주민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이들이 주체로 정착하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구성원 전체로까지 확대되어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본국으로 귀향하여 생활을 지속시키는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 이주민의 정보화교육 현황(푸른시민연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푸른시민연대는 1998년부터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육 및 인권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2003년부터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풀뿌리시민단체이다. 현재 푸른시민연대에 등록되어 참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등록 200여명에 지속참여 50명 정도이고, 국적별로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는 등록 300가정에 지속 참여인원 60명 정도이고, 국적별로는 몽골,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이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푸른시민연대에서 이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즉 컴퓨터 활용교육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당시 한국정보문화진흥원(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소외계층 정보화사업으로 지원되었던 프로그램에 본 기관의 성인문해교육(성인여성한글교실)이 선정되어, 컴퓨터와 인터넷회선 및 강사비 일부를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때 이러한 지원된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시작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당시 정보문화진흥원 차원의 지원은 성인문해교육의 교육 대상이었던 노인학습자에게만 지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주민들에게 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구축되어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자원인력으로 이주민들에게 컴퓨터 활용교육을 진행할 수는 있었고 본 기관은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1) 이주노동자 컴퓨터 교육 현황

	운영현황	수업내용
2004년	① 교사 : 자원활동가	① 컴퓨터 기초 ② 한글/ 타자연습 ③ 오피스 ④ PC 활용 ⑤ 인터넷 활용 ⑥ 동영상 홈페이지 만들기
2005년	② 교재 : 문해정보화 교육교재 컴사랑 글사랑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년	부교재- 프린트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	
2007년	③ 운영시간 : 주 1회 1시~2시(1시간) ④ 운영기간 : 연중진행	
2008년	*기본사항은 위와 동일 *변화된 사항 컴퓨터 반을 동아리화 하여 한국어 수업 전후로 하여 활동하는 것을 진행 시도 하였으나, 기관의 프로그램 일정, 개인 일정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 오전 수업만 진행함(12시~2시)	① 컴퓨터 하드웨어 이해하기 -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조 - 컴퓨터 분해하여 직접 확인 ② 엑셀 ③ 인터넷 활용 - 이메일 - 지도찾기, 버스노선찾기 - MP3 활용 - 압축프로그램 - 바이러스 - 인터넷 쇼핑 ④ OS 운용체제 설치 교육 ⑤ 메신저 활용 ⑥ 컴퓨터 구입 및 조립
2009년	* 기본사항은 위와 동일 * 변화 된 사항 ① 이주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아지면서 보다 전문화된 수업의 요구들이 생김 ②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단기커리큘럼으로 수업진행 (5-6주)	① 동영상 프로그램 (5주과정) ② 이미지보정 프로그램 (5주과정) - 동영상 제작 후 발표회 - 한글타자 대회 진행 (2차)
	* 이주노동자 컴퓨터 교육 욕구관련 코멘트 ①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흥미 위주의 이미지 편집, 홈페이지 만들기 등의 수업을 원함. ② 그러나 일부 무엇을 배우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다는 점. 보통 그런 분들의 컴퓨터 활용기술이 매우 낮은 편이었음 ③ 국내에 오래 거주한 방글라데시 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높음.	*수업내용에 대한 코멘트 ①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찍은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이미지 편집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영상,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중간에 수업을 듣고 싶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못 듣는 분들을 위해 컴퓨터 기초 수업도 진행하였음. ② 현재는 이미지 보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좀더 자세한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음.

2) 여성결혼이민자 컴퓨터 교육현황

	운영현황	수업내용
2004년	① 교사: 컴퓨터 관련 자원활동가 ② 교재: 문해정보화 교육교재 컴사랑 글사랑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컴퓨터 기초교육, 한글타자 MS 오피스 PC 활용 인터넷 활용
2005년	부교재- 프린트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 ③ 운영시간: 한국어 교육 수업 전 1시간 운영 초급으로 주 2회 수업	
2006년	④ 운영기간 : 연중 진행 (1학기/2학기)	
2007년	① 교사 : KT IT 서포터즈 ② 교재 : 서포터즈 들이 내용에 맞게 직접 준비하여 프린트로 나누어 줌 ③ 운영시간 : 주 2회 각 90분으로 주 1시간이 늘어남 ④ 운영기간 상반기 : 연중 진행 하반기 : 2007년 9월4일~12월27일 2007년 9월6일~12월7일 ⑤ 수업운영 : 초급반과 중급반을 나누어서 진행 함 -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이주여성 -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 이주여성 반으로 나누어 진행	한글, 인터넷 활용
2008년	① 교사 : KT IT 서포터즈 ② 교재 : 서포터즈 들이 내용에 맞게 직접 준비하여 프린트로 나누어 줌 ③ 운영시간 : 주 2회 각 90분 총 3시간 ④ 운영기간 2008년 1월8일~3월 7일 7명 3월11일~27일 6명 4월1일~9월30일 , 8명 4월3일~9월25일 한글 12명 10월2일~11월20일 7명 10월2일~11월25일 9명 ⑤ 수업운영 : 초급/ 중급으로 나누어 운영 ITQ(정보기술자격) 자격증 반 운영	한글, UCC 인터넷 활용 OFFICE PC활용 ITQ(정보기술자격)자격증 반운영

이상과 같은 교육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보화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구분과 체계가 필요하다.

① 1단계 : 정보(온라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적 도구인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교육이다. 이 교육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기본 구성과 이해, 소프트웨어의 이해와 활용방안 등이 속하며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속한다.

② 2단계 : 도구(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교육으로,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용자로서의 정보 활용교육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본국이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메신저 활용
- 인터넷쇼핑을 위한 가격비교 및 상품정보 활용
- 실생활에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방법(지도, 대중교통, 온라인콘텐츠 등)

③ 3단계 :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의 제공자로서 필요한 교육

-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활용하게 하는 방법
- 이를 위한 오픈소스나 소프트웨어의 활용 교육(동영상 편집교육, 이미지 보정교육 등)

④ 4단계 : 컴퓨터를 활용한 기술교육

-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법
- ITQ(정보기술자격) 자격증 반 운영

지금까지 확인해본 바에도 나타나듯이 컴퓨터 활용교육에도 대상자들의 욕구에 따라 최소 4단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경우 그 자녀(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정보 활용능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엄마라는 위치에 있고, 현재 다문화가정이 갖고 있는 배우자의 연령으로 인한 향후 가정경제의 주체로 서야하는 차원으로서의 정보활용자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활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3. 결론 및 제언

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사용자에게 의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활용자에 따라 활용가치의 크기가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된다. 결국 소외계층이나 이주민의 경우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고, 결국 제공자로까지 발전하는 단계별 지원을 진행해야 비로소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IT강국이라고 하는 하지만 정보의 핵심인 콘텐츠의 부족과 이를 풍부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편식증’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단지 미디어를 보는 또 하나의 도구나, 게임이나 하는 오락도구로 인식되어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부족한 인식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은 단시간 안에 단발적이고, 일회성인 지원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푸른시민연대와 같은 민간단체가 이상과 같은 교육을 그나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문화진흥원의 시설지원 및 KT-IT서포터즈 등의 기업의 지원과 자원활동가들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컴퓨터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보수가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는 등 민간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현실이다. 2004년부터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상의 교육을 위해 지원된 시설을 활용하여 이러한 교육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최소한의 상황에 맞춰 활용해야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이었고, 본 기관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정보화 교육의 지원이 확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마저도 2008년 이후 지원부처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혹시 우리사회에 다문화사회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진행되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책결정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러나 너무도 잘 알듯이 다문화사회는 끊임없이 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사회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 초입에 들어선 것이다. 즉, 앞으로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다시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서 매우 반갑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제언1. 정보화 시대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한다.

이를 위한 시설 및 인력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제언2. 정보를 이용하기위한 상시적 교육과 이용 공간 및 인력이 필요하다.

정보는 필요한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양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중앙 차원의 거대 지원시스템이 아닌, 지역 차원의 사랑방과 같은 항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인력을 배치하고 특정시간에는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모든 이들을 위한 단계별로 컴퓨터 교육을 지속하고, 평상시에는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공간에서 상시적인 상담 및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가 갖춰진 교육공간과 상시적으로 편안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며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 필요하고, 대상자들이 이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주하며 정보를 안내하는 상근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이미 다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면 보다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확신한다.

제언3. 정보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서 적극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컴퓨터교육에도 다양한 교육방법론 개발과 목표제시, 활용계획 등의 시도가 도입되어야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사례 개발이 필요하다.

제언4. 인터넷 공간에서의 다양성을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에서 이주민들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다국어사용설명 서비스 제공이나, 노인을 위한 글꼴 확대 등의 서비스가 절실하다. 또한 이러한 계층을 위한 별도로 정리된 포털의 하위 웹 공간이나 서비스의 마련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사례 2]

올리볼리 그림동화

방 대 욱
(다음세대재단 총괄실장)

 올리볼리 그림동화
Ollybolly Online Picture Book



www.ollybolly.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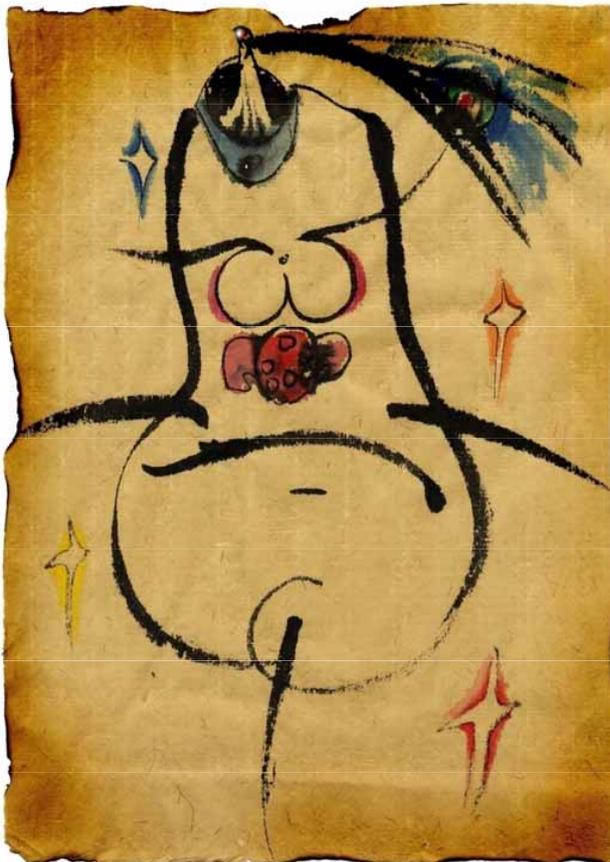


올리볼리 그림동화

2009. 12

방대욱 총괄실장

Daum Foundation General Director
bang@daumfoundation.org



다름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아니라
창조와
창의의
원천임

온라인에서 즐길 다문화 콘텐츠가 별로 없다.
 국민 되기에서 시민 되기 프로젝트!
 원주민의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자.
 어릴 때부터! 그리고 장기적으로
 One Source, Multi Use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어릴 때부터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이 접하지 못했던 나라들의 그림동화를
온라인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무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울리볼리는 다음세대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명으로서 “울복볼록” 한 느낌으로 다양함을 상징합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 대상국가

- 2008년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
- 이주여성 및 이주민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되, 현지 네트워크가 가능한 국가로 선정하여 진행
- 2009년 서아시아(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로 확대
- 2010년 남아메리카 국가까지 포함



제작완료 총42편 : 몽골,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제 작 중 총42편 : 레바논, 이란, 필리핀,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 터키, 이집트,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베냉, 르완다 등 진행중



올리볼리 그림동화 구성

- 저작권이 해결된 그림동화를 바탕으로 원작의 변형을 최소화 하여 제작되어, **그림동화의 원작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
- **한국어, 영어, 자국어(해당국가 언어) 등 3개 언어로 만들어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동화와 관련된 **부가컨텐츠(따라 말해보기, 이건 뭐예요, 게임 등)** 를 함께 제공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재미와 지식을 동시 전달
- 애니메이션 재생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UI)을 제공





올리볼리 그림동화 서비스

-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곳
 - www.ollybolly.org (2009년 3월 19일 오픈)
 - <http://kids.daum.net> (2009년 4월)
 - 인터넷 포털의 키즈 서비스 플랫폼 적극 활용 예정
- 올리볼리 사이트(www.ollybolly.org) 를 통해 그림동화가 제공되는 해당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메뉴 별도 운영



올리볼리 그림동화 서비스 대상

- 국내외 5~10세 어린이
- 이주여성 및 이주민
 - 언어교육에 대한 자료로 쓸 수 있음은 물론, 자녀들에게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음
- 다문화교육 현장
 - 학교, 지역사회센터 등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



올리볼리 그림동화 협력단체

- **아시아문화네트워크**(www.asiaculture.net)
- 작가 및 출판사 등 현지 네트워크, 그림동화 선정 등 지원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www.unesco.or.kr)
- 사업에 대한 해외 홍보, 다문화교육시 그림동화 활동 등 지원
- **한국외국어대학교**(www.hufs.ac.kr)
- 번역, 문화소개 대학생 자원봉사, 문화 감수 등 지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http://happylog.naver.com/asiansori.do>)
- 초벌역지원, 그림동화 모니터링 등 지원
-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
- 그림동화 서비스 플랫폼 제공, 홍보 등 지원



www.ollybolly.org



www.daumfoundation.org

[사례 3]

연천군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경 호 연
(연천군청 총무과)



사례 발표 순서

1. 교육 취지 및 목표
2. 교육내용
3. 교육결과 및 느낀점
4. 수강생 반응
5. 보안점 및 대안
6. 향후 계획
7. 정책적 제언



1. 교육의 취지 및 목표

취지

-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따라 주민정보화교육(주로 장애인, 노인 등)을 제공해 왔으나
-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계층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제공은 상대적으로 미약
- 결혼이민자 현황 : 223명, 0.02%(15~49세 여성인구의)

목표

- 다문화가정 연간 80명 교육 (2008년 574명 주민교육)
- 인터넷 생활화로 자녀들과의 소통창구 제공

2. 교육내용

과정명	요일 및 시간	기간	비고
컴퓨터기초	월 ~ 금 14:00~16:00	'09.9.14~9.25 2주간	마우스,자판, 윈도우, 문서작성 등
인터넷기초	”	'09.9.28~10.9 2주간	검색, 게임, 음악, 회 원가입 등

- **교 육 강 사** : 기존 주민정보화교육 강사 활용
- **교 육 장 소** :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PC 21대)
- **교육생확보** : 한국어교육 수강생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
그 외 희망자
- **교 육 교 재** : 경기도 노인정보화교육교재 2009년판

3. 교육결과 및 느낀점

- **총접수자** : 31명 (컴퓨터 17, 인터넷 14)
- **총수료생** : 16명 (컴퓨터 9, 인터넷 7)
- **설문결과** : 현 교육(강사,시간,내용)에 만족
하며 차후 연계과정 참여 희망
- **느 낀 점**
 - 특별한 교재와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닌 교류의 장이 필요
 - 소외계층 일수록 기초과정은 따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4. 수강생 반응

- 수강자들끼리 어려운 내용은 서로 공유함으로써 유대감 향상
- 지식의 전달이 아닌 즐길 수 있는 시간 제공으로 강사와 친밀감 상승



5. 보안점 및 대안

- 가급적 영어, 전문용어는 배제
- 동일한 패턴의 언어를 구사하고 반복 설명
- 본 강사 이외에 보조강사 추가하여 교육효과 증대
- 교육강사 수당 현실화로 강의 질 확보

6. 향후 계획

-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과정과 정보화기초과정을 연계하여 교육 추진
- 정기적 교육 진행으로 교육 수요자들의 계획적 참여 유도

7. 정책적 제안

- 여러 기관에서 추진되는 정보격차해소사업 대한 사례공유의 장 마련
- 다문화가정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인식 심어주는 프로그램 개발
- 예산지원 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게 수혜기관에 자율권부여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 포럼: 다문화가정의 정보 활용
[요약보고서]

[요약]

‘제1회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 포럼: 다문화 가정의 정보 활용’ 요약보고서

일시: 2009년 12월 8일

장소: 명동 유네스코회관 대회의실

주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I. 개회식



개회사.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전택수 사무총장은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써 교육과 문화, 인문사회, 정보통신에 관한 정보를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역할을 하며, 약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는 단순히 약자들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 관용의 마음을 베푸는 차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것이 섞여있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그 속에서 창의성을 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잡한 다문화사회의 많은 갈등을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잠재력이라고 강조하며 포럼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환영사.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한국 정보화진흥원 김성태 원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우리나라를 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로 세계의 중심국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보화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도 함께 덧붙였다.

김성태 원장은 디지털 지식 기반 사회에서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정보라고 강조하며, 정보는 평등하게 나누고 함께 공유하며,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 더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정의했다.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지역에 더 먼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밝은 사회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을 흡수하고 그들을 우리나라의 일원으로써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성태 원장은 변화의 시기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갈등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새로운 결과의 산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며, 이주민의 언어소통, 경제적 고통의 완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식기반 사회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실현해 나아가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I. 주제발표

<주제 1> 다문화 사회와 정보통신 매체의 역할과 과제

-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90년대 중반 아프리카에서 많은 남성 교수들이 젠더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시기를 언급했다.

다문화 열풍에 휩싸인 한국사회가 이야기하는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 다문화 이해와 같은 혼란스러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쓰는 상황은 10년 전 아프리카에서의 젠더 연구 열풍과 다름없는 사회적 위기국면에 처한 현상이다. 구체적인 예로 이주민 지원 정책에 불과한 것을 ‘다문화 정책’ 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 역시 이주민지원교육에 불과하며 한국 사회와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학교에서도 다문화교육이라는 것에 맞추기 위해 기본적인 지식전달에 급급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사회는 결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해 개인들이 본인이 이해하기 편한 수준에서 각자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정보통신 정보 접근에 대한 문제에 어떻게 다가가야할지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폐단이 선행학습이듯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우리의 문제 역시 선행학습의 폐단에 젖어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민 수준, 이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가족들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외국의 사례들을 가져와 끼어 맞추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법이며, 정보화와 결부시켜 이야기 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가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나 정보화 사회가 국민경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과 같이 한다.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문화 자체가 자유로운 정보통신의 교류를 통해 유동적 실체로 변하고, 고정된 각국의 문화가 아닌 유동적인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문제로 항상 지적되는 것이 문화적, 인종적 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책에 관한 논의 문제이다. 다문화 사회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은 이주민과 선주민이다. 한국사회가 이행하는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문화적 다양성, 성적 소수자, 여성, 취약계층 등의 온갖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이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이행함으로써 올바른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 2> 정보화를 통한 다문화 사회의 실현: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시사점

- 김양은 중앙대학교 언론학 박사

김양은 중앙대학교 언론학 박사는 앞서 발제한 한건수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연구의 시사점에 대해 발제를 시작했다.

어떤 사회이든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을 때 기성세대와 자녀세대에는 또 다른 갈등이 출현한다. 이러한 갈등의 해결은 어느 한 쪽의 교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즉, 다문화 사회 속에서 생겨난 갈등은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의 교육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통합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그 단면은 오히려 소수자에게 그들이 소수자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한 다수의 아이들이 다문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정보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의 교육이 많지만, 여성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은 도구적 기술접근 교육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교육이든, 소수자를 위한 교육이든 기계만 보급되는 것은 기본적인 1차적 단계이다. 이러한 1차적 접근교육 이후의 문화교육과 시민성교육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 정보화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상호문화교류 라는 다문화적 관점에 대한 교육이다. 이를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 즉, 김양은 교수가 제시한 다음의 4가지 교육은 1)정보기술능력의 향상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교육, 2)실생활에서의 정보 활용이 가능한 사회교육, 3)대화통로로서의 정보 기술 활용 및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문화교류를 위한 소통교육, 4)마지막으로 정보문화를 이해하고 콘텐츠 생성 및 이용능력, 정보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위한 문화교육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4단계의 정보화교육과 연결되어지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 3>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보화교육정책 지원방안

- 박영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지원부 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지원부 박영식 부장은 다문화사회 정책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미비하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정책보다는 사업을 소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106,884명으로 2008년 891,341명보다 215,543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다문화가족과 공존하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 정책 지원 관련 부처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여성부 7개 부처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다문화관련 종합적인 IT 지원정책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기반 사회, 정보사회에서 인터넷과 컴퓨터는 관계와 소통을 유지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여성 결혼 이민자에게 효율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정보화 백일장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 결혼 이민자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정보화 교육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책 환경과 외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결혼 이민자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전문 연구 개발 수행 자료와 운영성,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보유함에 있어서는 강점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다문화 정보화 교육 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2)다문화가족 정보화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유형별 접근이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3)부처 간, 중앙-지방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및 연계체제 확립이 미흡한 점, 4)다문화 정보화지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미비한 점, 5)정책성과의 계량화가 어려운 점은 위험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분석으로 박영식 부장은 4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다문화 정보화 교육 기반을 구축할 것, 둘째 ICT를 통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할 것, 셋째, 다문화 정보화 실태조사 및 연구할 것, 넷째 다문화 정보화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할 것,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정보화 교육에 있어 구성원들은 단순한 정보격차해소 지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민으로 인식하고 인적, 문화적 자원으로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미래발전전략 수립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ICT를 활용한 다문화 가족 정보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발표 1> 이주민 정보화교육 현황과 대안

- 문종석 푸른시민연대 대표

푸른시민연대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모두 문종석 대표는 푸른시민연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정보화교육 현황 분석으로 발제를 시작했다.

푸른시민연대에서 이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지난 2004년부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소외계층 정보화 사업으로 지원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시작 되었다.이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면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컴퓨터 활용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기술, 오피스활용, 포토샵과 같은 이미지 관련과 같은 직업과 관련한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미디어와 활용된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이주노동자보다 더 복잡한 욕구가 등장하는 이유는, 결혼이민자가 가정에서의 정보 활용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의 결혼이민자 가정은 남편의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고, 자녀의 게임중독과 같은 문제를 제어 할 수 있는 엄마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컴퓨터 정보에 관한 욕구가 생겨났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활용교육에도 대상자들의 각기 다른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최소 4단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문종석 대표는 이주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4단계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했다. 1단계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적 도구인 컴퓨터의 활용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교육이다. 2단계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교육으로,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용자로서의 정보 활용교육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이주민들은 본국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메신저 활용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3단계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의 제공자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블로그나 카페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를 위한 오픈소스나 소프트웨어의 활용교육을 받는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기술교육이다.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법, 정보기술자격 (ITQ) 자격증 받을 운영하는다.

‘구슬도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컴퓨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활용자에 따라 활용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단지 미디어를 보는 또 하나의 도구나, 게임이나 하는 오락도구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부족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4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정보화 시대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상시적 교육과 이용 공간 및 인력

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교육의 문제로서 적극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인터넷 공간에서의 다양성을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소외되면 우리 사회에서도 소외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주민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일어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사례발표 2> 올리볼리 그림동화

-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총괄실장

다음세대재단 방대옥 총괄실장은 온라인에서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다문화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올리볼리 그림동화를 제작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원주민의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국민 되기에서 시민 되기 프로젝트가 바로 올리볼리 그림동화이다. 다음 세대재단의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다름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아니라 창조와 창의의 원천이다” 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어릴 때부터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나라들의 그림동화를 온라인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무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이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2008년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9년 서아시아(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로 확대되었고 2010년에는 남아메리카 국가까지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몽골,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총 42편이 제작 완료 되었고, 레바논,이란, 필리핀,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한 그림동화 42편은 제작중에 있다. 또한 터키, 이집트,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베냉, 르완다 등 여러국가를 대상으로 진행중에 있다.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저작권이 해결된 그림동화를 바탕으로 원작의 변형을 최소화하여 그림동화 원작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다. 한 국어, 영어, 자국어 등 3개언어로 만들어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화와 관련된 부가콘텐츠(따라말해보기, 이견뵈어요, 게임 등)를 함께 제공하여 문화 다양성에 대한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국내외 5~10세 어린이와 이주여성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올리볼리 그림동화는 해당 사이트에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올리볼리 사이트를 통해 그림동화가 제공되는 해당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메뉴 또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 문제로 다운로드 불가능하며, 앞으로 콘텐츠 확충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

<사례발표 3> 연천군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 경호연 연천군청 총무과

연천군청 총무과 경호연 분은 연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 발표를 했다.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에 따라 주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제공해왔으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계층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제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다문화 가정을 연간 80명(2008년 574명 주민교육실시) 교육한다는 목표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들이 주민자치센터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기초와 인터넷기초 두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교재로는 경기도 노인정보화 교육교재 2009년판을 사용하고 있다. 총 접수자는 31명이고 총 수료생은 16명이다. 수강생들은 어려운 내용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지식의 전달이 아닌 즐길 수 있는 시간 제공으로 강사와 친밀감 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

교육에 있어 강사들은 가급적 영어나 전문용어는 배제하여 이주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일한 패턴의 언어를 구사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 강사의 수당 현실화로 강의 질을 확보하고(현재 시간당 만 오천원), 본 강사 이외에 보조강사를 추가하여 교육 효과를 증대 할 것을 꾀했다.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정보화 기초 과정을 연계하여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기적 교육 진행으로 교육 수요자들의 계획적임 참여를 유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추진되는 정보격차해소사업에 대한 사례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다문화 가정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화교육 예산 지원 시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게 수혜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해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협조가 필요함을 밝혔다.

IV. 종합토론

주요내용: 포럼 주제 및 발제문에 대한 의견 공유 및 논의 등

토론자: 문경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토론1

- 문경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문경희 교수는 다문화사회의 열풍 속에서 또 다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토론을 시작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정보격차를 느끼고 있다. 사이버세상에서는 절대 한국의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느낄 만큼 그들은 온라인 활동에 있어 여러 장애와 불편을 겪고 있다. 때문에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문경희 교수가 호주에서 생활했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 호주의 다문화 관련 사이트나 정보포털 사이트에서는 7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률, 의료, 교육, 고용, 실업서비스와 같은 중요 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작은 변화가 있을 때 마다 다국어 변환서비스 역시 꾸준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이는 호주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이나 이주민들이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한국은 호주의 이러한 다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되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7개국 언어서비스 구축 사이트를 누가 만들 것인지, 누가 번역할 것인지와 같은 정책적인 예산 지원과 인력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가 없어 늘 문제가 되어왔다. 한국에서는 다문화 정책이 아닌, 이주민 지원정책이 짧은 시간동안 많이 실행되어 왔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포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경희 교수가 생활하고 있는 창원지역의 다문화 지역 센터에서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는 컴퓨터가 없고, 다문화 지역 센터에서 배우기 힘든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처럼 도구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다. 센터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는 내려 보내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이 항상 문제점이다. 이는 모든 문제를 단발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시간과 인력, 예산이 부족하니 체계적인 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기록 남기기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켜도 취업에 연계되는 경우도 없고, 정보화 문제에 있어 동기부여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어느 센터에서나 똑같이 등장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정보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정보화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실수의 반복을 피하고, 정책적인 좋은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 2

-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이주 여성 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했다.

우선, 정보문화진흥원의 작업이 묻혀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치는가 이것은 정보화 교육이 아니다. 기술적인 면을 떠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첫 번째 교재에서 교육이 끝나버리고 인터넷 교재 2권은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보문화진흥원의 작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정보화를 통해 이주여성 또는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가, 아니면 침해되는가? 한국의 미디어를 통해 여성의 이미지가 고착화 되고 있다. 며느리, 국제결혼, 인신매매, 위장결혼, 가부장제, 폭력피해자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이 한국의 미디어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가?

지금 정부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정보화 교육인지, 한국사회가 열린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접근성을 높이고 인프라를 구축, 활용하는 점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서 발제한 연천군의 다문화교육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프라 구축도 취약하고 활용도 또한 낮다는 현장의 반응을 받아들여 조정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159개로 굉장히 미약하다. 주민자치센터를 최전선으로 원주민과 이주민의 교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그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리가 어떻게 정보화를 통해서 열린 다문화 사회를 증진 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인식개선의 문제이다. 즉 가치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주민이 어떻게 이문이 주체가 된 정보화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김양은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교육, 소통교육, 사회교육, 문화교육 4가지를 모두 진행하여 이주 여성 스스로 문화생성을 위한 창의적 문화 창달에 각 주역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주민이 주체가 되고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 방향으로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많은 대부분의 정보화 교육을 논의 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1단계, 최고 2단계에 머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정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진흥원에서 조차 1,2단계에 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기존에 마련된, 이주민이 주체가 되는 대표적인 4개의 사이트를 통해 이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고, 스스로 지원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 모든 이를 위한 정보 포럼: 다문화가정의 정보 활용
[부록]

참가자 약력

참가자 명단

참가자 약력

[발표자]

한건수

현재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문화인류학회 이사,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교육개발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이주, 동아시아의 다문화적 변화,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다국적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최근 출판한 저서로 “다문화 코리아: 한국의 다문화 정세는 축제인가 난제인가?”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등이 있다.

김양은

중앙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디어 교육, 사이버 문화 등이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는 바 있으며, 지난 2006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 위탁 과제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사이트 선정위원 및 EBS '미디어 바로보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영식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지원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초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홍보를 위한 전시관 건립에 참여하였고, 2003년부터 장애인, 고령층, 비문해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정보 소외계층 대상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배움나라’ 및 ‘도움나라’ 운영, 지역별 정보접근센터 지원 및 정보화교육 업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문중석

1994년에 처음 지역운동을 시작하여 동대문 주민문화센터로 시작한 푸른시민연대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1998년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모두”를 건립하여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민 여성 어머니들을 위한 사회적 공간 지원 프로그램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이주민가정의 지역사회화의 소통을 돕고 있다.

방대옥

다음세대재단 총괄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세대재단은 자발적 기부로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현명한 사용을 통해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세대의 창조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다음세대재단에서는 또한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연구자의 논문 저술을 지원하고 문화다양성 기금사업을 통해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과 번역 및 창작을 지원하는 등 문화다양성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호연

연천군청에서 이주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담당실무자이다. 연천군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농촌 지역에 국제결혼으로 이주여성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한국문화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마련하여 올해 실시하고 있다.

[토론자]

문경희

문경희 박사는 호주국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충남 여성 정책개발원의 연구원 및 부산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시고 현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장 한국염(60) 목사는 서울 창신동에 청암교회를 세우고 빈민구제 활동을 펼치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2001년 여성들과 독립해 나온 것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주여성 관련 대표적인 NGO로써 '06년-'08년까지 진흥원 지원을 받아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사업을 운영하였으며, '06년 진흥원 연구 위탁과제(과제명 :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참가자 명단

[발표 및 토론]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Tel: 033 250 6874

Fax: 033 244 6870

E-mail: yoruba@kangwon.ac.kr

김양은

중앙대학교 미디어공연영상대학

Tel: 02 312 6869

E-mail: archekim@hanmail.net

박영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지원부

Tel: 02 3660 2551

Fax: 02 3660 2569

E-mail: yspark@nia.or.kr

문중석

푸른시민연대

Tel: 02 964 7530

Fax: 02 3293 7530

E-mail: epurun@naver.com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Tel: 02 6718 0630

Fax: 02 6718 0912

E-mail: bang@daumfoundation.org

경호연

연천군청 총무과 전산관리분야

Tel: 031 839 2084

Fax: 031 839 2309

E-mail: kjamjalee@korea.kr

[사무국]

조혜진

한국정보화진흥원

Tel: 02 3660 2506

Fax: 02 3660 2569

E-mail: chopdy@kado.or.kr

정소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

Tel: 02 755 1105 (ext. 600)

Fax: 02 755 7477

E-mail: soyoung@unesco.or.kr